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No.45
2010.01.20

교육·과학 百年大計 세종시 더 큰 세계로



세종시의 모델 중 한 곳인 스위스 제네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청와대 사랑채로 놀러 오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부모니터의 힘

스타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세종시, 국가 성장의 중심축으로"



정운찬 국무총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극대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 주어진 기본 의무다.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밤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는가.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상의 막중한 국가적 대사다.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다.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 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 세종시 발전 방안은 단지 세종시만의 것이 아니다. 충청 지역과 우리나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발점이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 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 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 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다.

건국 이래 최대의 수주액을 자랑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였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다. 세계 첨단의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기술원 등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 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의 대덕과 오송, 오창은 물론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전국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 방안은 행정도시 계획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 그동안의 갈등과 우려를 씻어내고, 나라와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월 11일,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문 중에서 G

Weekly
2010.01.20
No.45(통권 146호)

Contents



COVER STORY

세종시는 전후(戰後) 독일 부흥의 견인차 노릇을 한 드레스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 RTP, 초거대 강입자가속기(LHC)를 보유하고 수많은 과학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2006년 스위스 제네바 지하 1백 미터에 건설한 LHC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중이온가속기. 이명박 대통령은 LHC를 직접 찾아볼 정도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세종시에도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해 과학입국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



16



10



38

일러스트 · 남동윤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1.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세종시 백년대계
지역발전 상생시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에 제2의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가져올 교육·과학도시로 거듭난다. 세종의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반도 중원(中原)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축인 세종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56

공감 라운지

GONGGAM KOREA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44호(2010년 1월 13일자) 기획특집 중 ‘서민경제가 미소 짓는 그날까지’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소금융, 서민 살리는 희망의 씨앗”

“서민들을 보듬는 정책을 속속 내놓는 정부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한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다양한 제도가 생겨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희망을 되찾을 것 같아 기쁩니다.”_김민석

“미소 금융 개소식 기사가 반가웠습니다. 몇 년 전 사금융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미소금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_신재현

“대전 ‘도마 큰시장’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정부가 펴온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에 찬사를 보냅니다. 상인회에서 미소금융을 통해 1억원을 지원받아 연리 4.5퍼센트의 초저리로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시장 상인들에게 1인당 5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더니 상인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이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 번 서민을 위해 미소금융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감사하며 더 많은 자금을 확충해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_손중달

“미소금융 자격 요건 완화됐으면…”

“미소금융 대출 대상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자격 요건이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이록

44호 문화현장 ‘가상현실 동화 구연 체험관 개관’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체험형 동화 구연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어린이들이 동화를 가까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술혁신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좋은 도서를 많이 구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학 전공자들에게서 독서와 관련된 정기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_두전하

44호 정책 브리핑 ‘드림스타트 홍보대사 나경은 아나운서’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드림스타트 운동의 개요와 홍보대사 나경은 아나운서의 소견이 담긴 ‘정책 브리핑’ 기사가 돋보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형편에 따라 어려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가난의 대물림은 민주주의의 어떤 그늘이자 부끄러운 초상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돌보는 원스톱 서비스의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은 참으로 박수를 받을 만한 좋은 정치의 일환이라고 느꼈습니다.”_홍경석





알립니다

1 U-City 서비스 공모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U-City'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체감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U-City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도시(City)'의 합성어로, 첨단 IT를 기반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U-City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U-City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첨단 미래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U-City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독창성, 실현 가능성, 시민 친화성을 기준으로 2차례 평가를 실시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국토해양부 Tel **02-2110-8201**
u-cityservice.org

2 서울역에서 야간 귀농교육 받으세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울역에서 야간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인생2막 귀농열차에 탑승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이번 야간 귀농교육은 1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4기수(한 기수당 5일씩)로 나눠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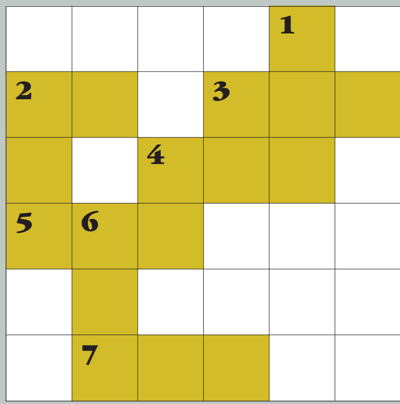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여느 귀농교육과 달리 평소 귀농, 귀촌에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역사 내에서 이뤄진다.

야간 귀농교육 수업은 귀농, 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 교육과 농촌 정착 정보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토요일에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직접 농사를 체험하는 현장탐방 교육이 준비돼 있다.

야간 귀농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1월 11일부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기수별 50명씩을 모집한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Tel **031-299-2740 www2.rda.go.kr/go2nong**

공감♥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월 2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43호(2010년 1월 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우랑주 3 연무대 6 행복 8 원주민 9 분임조
세로 1 우측통행 2 주연 4 무상원조 5 시민의식 7 복분자

〈Weekly 공감〉 4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신영 · 경기 파주시 교하읍
최정자 · 강원 강릉시 포남동
김영민 · 대전 대덕구 비래동
신범순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이가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가 로

2.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OO을 바꾸는 주부 모니터의 힘."
3.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 있는 집채. "북악산 자락, 시민들의 쉼터이던 '효자동 사랑방'이 청와대 OOO로 새롭게 개관했다."
4. 옷, 머리 따위를 잘 다듬어 입거나 손질한 모양새. "그는 언제나 옷 OOO가 단정하다."
5. 연초에 회사나 관공서 등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이죠.
7. 원안(原案)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고친 안. "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도시, 첨단·녹색산업도시, 글로벌 투자도시, 지역발전 중심도시 등 5대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내용의 OOO을 담은 세종시 발전 방안이 발표됐다."

세 로

1. 깃털이 파란 빛깔을 띤 새.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새로 알려져 있죠.
2.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되죠.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에 약 50만명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세워지는 도시.
3.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일.
4. 음식을 식당 등에서 사 먹는 것.
6.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 발레리나, 발레리노 같은 이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공감 라운지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공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주부 최정자(53) 씨는 지난해 봄부터 인터넷으로 〈Weekly 공감〉을 눈여겨보다가 최근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최 씨는 "사회 이슈나 정책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들이 많이 소개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Weekly 공감〉을 보게 된 동기는.

정부 정책 포털 사이트 '공감 코리아'에서 생활정보를 눈여겨 찾아 읽다가 〈Weekly 공감〉을 알게 됐어요. 생활에 도움 되는 유익한 정보성 기사나 좋은 글들은 스크랩해서 읽곤 하는데, 〈Weekly 공감〉에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 집 안 곳곳에 붙여두고 틈틈이 읽고 있어요.

〈Weekly 공감〉에서 유익하다고 느낀 것은.

주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생활상식이나 여행지 추천, 책·공연 소개 등 문화 기사들이 유익하고 좋더군요. 지난 호에 '주택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평소 노후에 대비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 기사를 읽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Weekly 공감〉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따뜻한 사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실렸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기사를 읽다 보면 사람 이야기에 눈이 갈 때가 많아요. 과거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함께 희망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Weekly 공감〉에 바라는 점은.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바라는 점들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불편을 초래해 새롭게 바뀌어야 할 정책 사항들을 국민들이 앞장서 〈Weekly 공감〉을 통해 알리고 소통한다면 좀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지난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정원호 서울 강서구 공항동

1. 주택연금에 관한 기사를 잘 봤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 집 한 채 장만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세상에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노후에 관한 걱정을 조금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또한 미소금융, 희망플러스 통장처럼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 공교육을 살리려는 끊임없는 노력,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과 국민의 고충을 〈Weekly 공감〉을 통해 많이 알게 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기회가 혁신이 되고,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해가기를 응원합니다.
3.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을 비교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입 농산물의 장단점, 국산 농산물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남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

1. '월드컵 대표팀 남아공 전지훈련'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하루빨리 현지 적응 능력과 팀워크를 길러 멋진 승부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2. '서민경제가 미소 짓는 그날까지'를 읽고, 아무리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진다 해도 대다수 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제대로 살아난 경제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들이 우리 서민이 감지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체 평균 수치만 바라보고 낙관적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나아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합니다.
3. 농촌에서는 겨울철만 되면 농한기를 맞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한기를 효율적으로 보내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20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교육·과학 백년대계, 세종시 더 큰 세계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부모보다는 아이의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낳고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아이로 미래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드디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막판 진통 끝 1월 15일부터 인터넷 접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돈이 없어 대학 공부를 못하거나 학자금으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연합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오른쪽)이 1월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자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가 당초 계획대로 올 1학기부터 시행된다. 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월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등록금 상한제는 당초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미 1학기 등록금이 결정된 대학이 많아 2학기부터 적용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8백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 1학기부터 등록금(총 4천만원 한도)은 물론 별도의 생활비로 학기당 1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상환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백92만원)를 넘는 시점부터 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혜택을 보는 대학생들이 9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 40여만 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으로 2만여 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가상승률 1.5배까지'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여야의 극적인 합의 과정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을 1월 말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2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3주가량 걸려 2월 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늦어도 1월 18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1학기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이 주장한 등록금 상한제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되, 인상률 상한선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했다. 대신 각 대학에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인상률 상한선을 어긴 사립대학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월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으로 장학재단은 올해 9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상환제 대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리 재학 중에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무조건적 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하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엔 1인당 연 5백만원씩 장학금

이번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통과시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몇 가지 보완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매년 4백 50만원의 무상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득 1~5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성적 우수 학생들은 1인당 연 5백만원씩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DB

지난해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학자금 지원정책 발표회.
이명박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입생은 등록 기간 중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입생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신입생은 학교를 특정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정 과장은 또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으로 학자금으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월 1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확정됨에 따라 올 1학기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1월 15일부터 학자금 포털 사이트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절차는 최소 등록 마감일 열흘 전까지는 마쳐야 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 가구 소득분위 중 7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제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대략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생의 경우 등록 기간인 2월 2~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입생 등록 마감일을 2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다. 또 아직 자신이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원한다면 일단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들은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더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통보하는 등록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학자금 포털 **www.studentloan.go.kr**
장학재단 **www.kosaf.go.kr**


G20 사진 갤러리
THE LONDON SUMMIT 2009
PITTSBURGH SUMMIT 2009



우리 사랑채에서 만날까요?

청와대 맞은편 옛 효자동 사랑방을 새롭게 꾸민 '청와대 사랑채'가 1월 5일 공식 개관했다.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 서울의 발전사, G20 정상회의 체험 원탁 등을 공개해 내외국인들로부터 청와대 주변의 명소로 사랑받을 듯하다.

"어르신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선물받은 각 나라 기념품들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아이들은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대통령 집무실 의자에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앉아보기도 하고요.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류 드라마 주인공 사진 앞에서 기념 촬영을 즐깁니다."

청와대 사랑채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청와대가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있다. 지난 15년간 대통령 박물관으로 쓰인 '효자동 사랑방'을 청와대 주변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리모델링한 곳으로, 대통령 중심의 기존 박물관에 비해 대한민국과 서울의 어제와 오늘,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녹색성장 홍보관, G20 정상회의 체험관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졌다. 한적하게 쉴 수 있는 카페와 기념품숍도 마련됐다.

1 올해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체험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 체험 원탁.

2 1층 기념품 가게에서는 청와대와 대한민국 관련 기념품을 살 수 있다.



2

1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의 저서 초판본을 선물받았다.

2 사랑채 1층에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이 전시돼 있다.

3 2층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는 국새를 찍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4 1층 공방에서는 수공예 장인들의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홍승국 장인의 금속공예 시연 장면.

5 녹색성장관의 국내외 녹색성장 사례 홍보 코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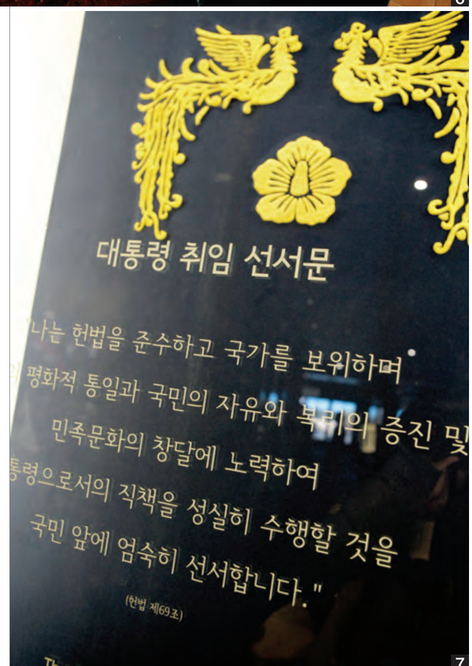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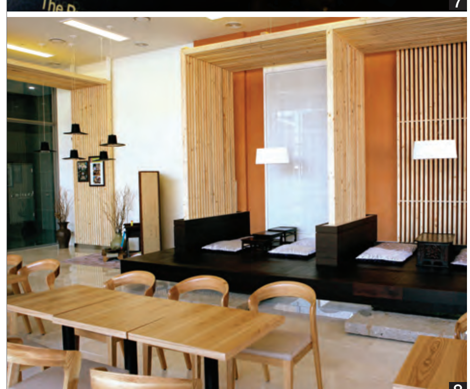

3


4


5







사랑채 1층에는 국가홍보관, 하이서울홍보관이 있다. 국가홍보관에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돼 있고,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화폐 속 인물 전시물 등도 볼 수 있다. 하이서울홍보관에는 서울의 변천사, 상징물 해치, 맛과 멋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관광 명소, 한류 드라마 주인공 사진들이 있는 한류존 등이 배치돼 있다.

2층에는 역대 대통령관, 대통령 체험관, 녹색성장관, G20 휴게실이 있다. 대통령관 중에서도 국빈 선물관은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 외국 정상 등 해외 국빈들에게서 받은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인기 코스다.

옛 효자동 사랑방 재단장… '청와대 사랑채' 손님맞이 '활짝'

박정희 대통령이 1966년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서 받은 백마상,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릭파이 태국 총리에게서 받은 유기 식기세트 등 진귀한 물품을 구경할 수 있다. 최근의 선물로는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서 받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의 저서 초판본과 도자기 찻잔 세트, 2008년 5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서 받은 실크 부채 등이 볼거리다.

사랑채에는 방문객들의 체험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이 특색이다. 국새(國璽)를 찍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장소도 모의 체험할 수 있다.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2층 포토포인트. 방문객의 모습이 청와대 배경과 대통령 내외의 사진과 합성돼 마치 함께 사진을 찍은 듯한 효과를 연출한다. 영상촬영 기법인 크로마키(블루 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 합성사진은 즉석에서 방문객의 e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쉰다. 총 예상 관람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청와대 사랑채 Tel 02-723-0300 www.cwdsarangchae.kr

6 대통령 집무실과 비슷하게 꾸민 대통령 체험관에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7 사랑채 2층 대통령관에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 등 역대 대통령 관련 전시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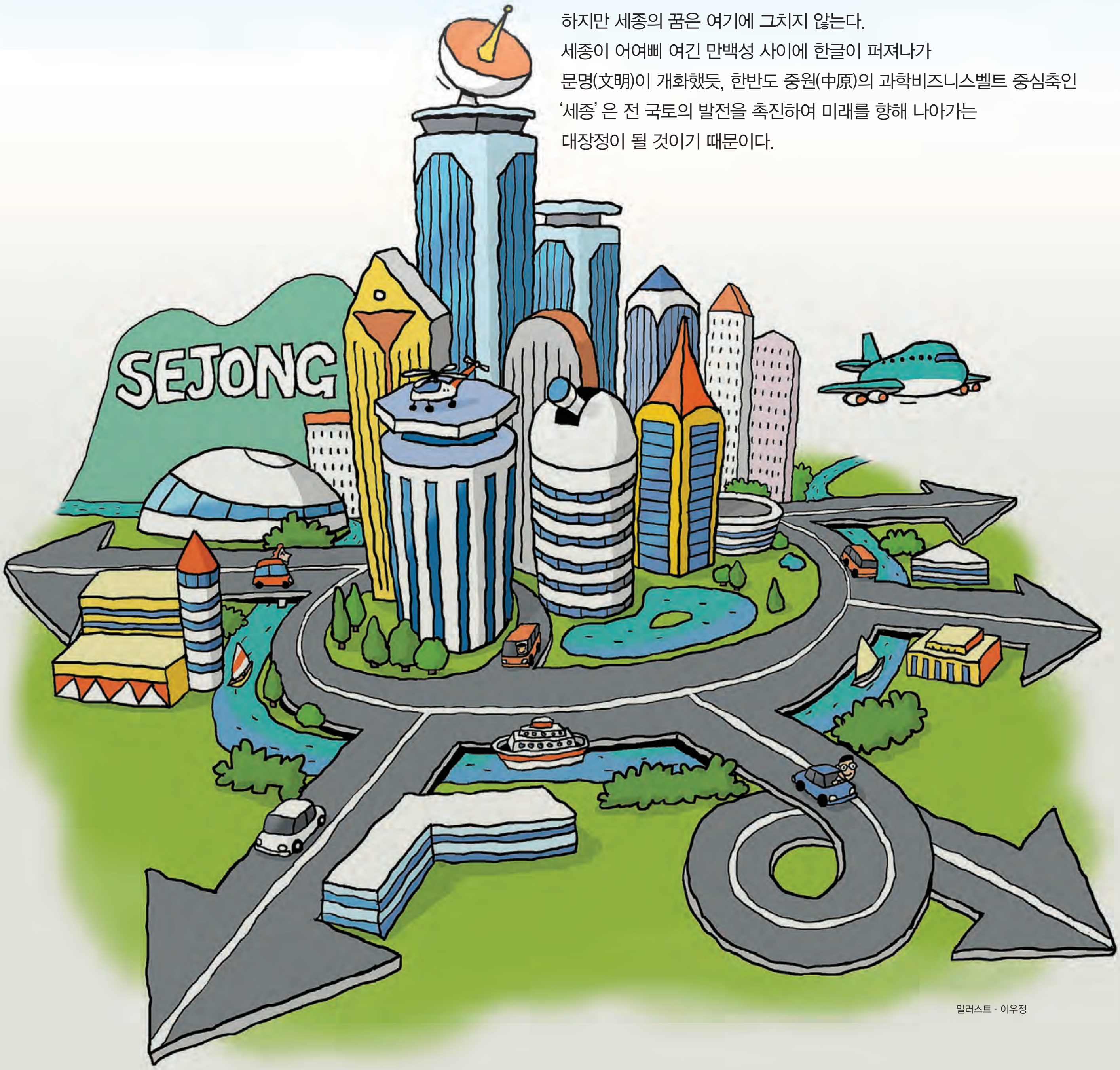
8 1층에는 한국 전통의 미를 담은 카페 '차림'이 있다.


대학생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사회인의 능력으로 상환합니다
호텔조리학과
최원준군에게
빌려주고
한식조리사
최원준씨에게
받습니다
경영학과
김다영양에게
빌려주고
해외펀드매니저
김다영씨에게
받습니다
항공기계과
정건우군에게
빌려주고
항공정비사
정건우씨에게
받습니다

기획특집

세종시 백년대계 지역발전 상생시대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시대를 꽃피운 대왕 세종.
위대한 세종의 이름을 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에 제2의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가져올 교육·과학도시로 거듭난다.
하지만 세종의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세종이 어여삐 여긴 만백성 사이에 한글이 퍼져나가
문명(文明)이 개화했듯, 한반도 중원(中原)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축인
'세종'은 전 국토의 발전을 촉진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이우정

업그레이드 세종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飛上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달군 세종시 수정안이 '발전 방안'이란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세종시는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경제를 견인코자 하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작은 파이를 쪼개는 일시적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국가적 발전 방안, 새로운 세종시의 진짜 얼굴이다.

새해 들어 전국에 내린 서설(瑞雪)이 녹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한창인 충남 연기군 일대 세종시 부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찾노라면 단연 밀마루 타워다. 세종시 한복판에 있는 높이 42미터(해발 98미터)의 밀마루 타워는 타워 꼭대기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주변을 유리벽으로 둘러싼 건물이다.

이곳 전망대에 올라서면 건설 중인 세종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외지인들에게 낯설게 들리는 '밀마루'란 이름은 충남 연기군 종촌면의 옛 지명으로 '낮은 산등성이'란 뜻이라고 한다. 취임 직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정운찬 국무총리도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세종시를 첫 공식 방문하는 길에 이곳 전망대에 올랐다.

그동안의 건설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이곳 현장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세계적 기업들도 입주를 선호할 명품 자족도시를 건설



동아DB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여 만인 1월 11일 세종시 발전 방안(수정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9월 3일 정 총리가 '후보' 신분으로 세종시 계획 수정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논란이 촉발된 것을 기점으로 하면 4개월여 만의 일이다.

자족기능 강화된 새로운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정 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세종시 추진기획단(지난해 11월 5일)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11월 16일)를 출범시켜 세종시 수정안을 준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등하는 여론 속에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란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던 대선 공약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로운 세종시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새로운 세종시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부 조직의 일부를 뚝 잘라 9부 2처 2청이 이전하는 내용의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자족기능이 강화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세종'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날 발표된 발전 방안의 골자는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도시로 새로 규정한 외에 △자족용지 확대(전체 부지의 6.7퍼센트→20.7퍼센트) △주요 기능 수정(행정→산업, 대학, 연구) △조성기간 단축(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2020년까지 집중 개발) △투자 유치 신설(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화, 삼성 한화 등 대기업 투자 유치) △고용인구 증대(8만4천→24만6천명) △총인구 증대(17만→50만명) △인센티브 도입(맞춤형 부지 공급,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실속 있는 정책들을 챙겨 넣었다.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 여론'을 따지자면 찬성 쪽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찬반(贊反) 지형도는 지역별로 커다란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와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각각 54.2퍼센트, 51.3퍼센트로 절반을 넘어섰고, 반대여론은 37.5퍼센트, 34.0퍼센트에 그쳤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충남 연기군 일대 세종시 전경.

동아DB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세종시 수정안 발표 현장. 정운찬 총리 등이 이해와 화합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속내는 복잡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는 '서울 압도적 찬성, 영남은 반반, 광주는 충청보다 반대가 더 많다'였다. 세종시와 '당장은 무관해 보이는' 광주 지역의 반대가 더 드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여론조사에서나 대전, 충남, 충북 등지의 여론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에도 원안 추진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로 여전히 '다수'였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전 실시된 한국갤럽의 조사(지난달 26일) 결과와 비교하면 충청권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57.1퍼센트→55.8퍼센트), '수정안대로 추진해야 한다'(25.8퍼센트→36.9퍼센트), '모름·무응답'(17.1퍼센트→7.3퍼센트) 등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수정안 찬성이 다소 늘어나는 변화를 조금은 보이고 있다.

분명 수정된 세종시 발전 방안이 원안과 비교해 '풍성한 선물꾸러미'로 보이는데도 왜 충청권의 민심은 아직도 큰 틀에서 볼 때 요지부동일까.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충청인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때 원안 고수를 다짐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세종시 관련 일지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2004년	4월 17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11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발족
2005년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4월 7일	대통령 직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출범
2006년	1월 1일	건설교통부 산하 행정도시건설청 개청
	12월 21일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로 확정
2007년	3월 27일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2008년	2월 29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행정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산하로 변경
2009년	9월 3일	정운찬 총리 후보,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 발언
	11월 5일	세종시 추진기획단 출범
	11월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공약 관련 공식 사과와 수정 의지 공표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세종시 발전 방안은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세종시의 출생과 성장의 이력을 한번 되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출발점은 2002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에서 비롯됐다. 당시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은 수도권 민심의 이반을 부르고 국론이 분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선 공약 이행'이란 부담을 안은 당시 정권은 결국 정부 조직의 일부인 9부 2처 2청을 충청권 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밀어붙여 지금의 한나라당인 야당의 반발 속에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에도 정부 조직의 일부를 분리해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성 우려가 제기됐으나 화상회의, 책임총리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예정된 이주 시작 일정이 2014년부터로 당장 '코앞의 현실'이 아니다 보니 실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일단 미뤄둔 상태였다.

그러다 2014년이 점차 목전으로 다가오며 잠재됐던 우려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 부분적 정부 부처 이전으로 향후 20년간 1백

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퍼센트에 불과해 실제 유입이 가능한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단추를 잘못 꿰고 있었던 것이다.

조원동(총리실 사무차장) 세종시 기획단장은 "세종시 발전 방안은 어제의 잘못된 약속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세종시 발전 방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동아DB



동아DB

찬성과 반대 여론이 들끓는 세종시 수정안,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와 함께 일각에서는 땅값과 세제 지원 등 '특혜 논란'과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블랙홀' 논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씩 따져보면 절대 특혜가 아니다"며 "세종시가 타 지역에서 유치할 기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서 세종시의 발전 원동력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핵분열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시 한 곳으로 국가 자원과 특혜가 지나치게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시설 투자 외엔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권 실장은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 공급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다른 도시에도 가능하다.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 지방과 협의됐던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한 곳으로 국가 자원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했다"며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와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데 애썼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여전히 정부 부처가 이전해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엄청난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부실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더욱 치열한 국가 간 경쟁관계에 놓여 경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먹을거리 창조와 경제적 우위를 찾기 위해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이 나와야 하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의 세종시 발전 방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세종시 발전 방안을 '뜨거운 감자'라고 불렀다. 혹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찬성과 반대의 양 진영으로 나뉘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국론 분열 시험대 앞에 놓여 있다.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란 다음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도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각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조차 맞서 있다. 더구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예민한 시점'이다. '진실'보단 날선 비판과 대안 없는 지적이 난무할 때다.

세종시 발전 방안을 발표한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충청권에 내려가 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정안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알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발전 방안이 진정 '판도라의 상자'라면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직 희망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희망'이기 때문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세종시 발전 방안은 국내외 우수 대학 등 선진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핵으로 삼아 세종시를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자족형 경제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타 지역 확산되는 핵분열 효과 나올 것"

세종시 발전 방안,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가 세종시 발전 방안(수정안)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원안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비효율과 자족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발전 방안은 원안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존 세종시 계획은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특별법에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수단에 관한 조문이 없다. 또한 기본·개발계획에는 첨단 지식 기반, 대학 및 연구기능 등이 제시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극히 미미하다.

원래 계획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가능 용지도 전체 개발면적의 6.7퍼센트에 불과해 대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하다. 기업, 대학 등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 저가 공급 및 세제·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도 결여돼 있다. 연구용역, 공청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도출됐으나 실제 법령과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 발전시키지 않고는 당초 계획했던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발전 방안의 목표는 세종시를 자족성이 뛰어난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해 중부권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발전 방안은 국내외 우수 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도시 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





세종시 원안은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결여돼 목표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어렵다.

2배 많아진 투자 8.5조 ⇨ 17조

3배 늘어난 일자리 8만 ⇨ 25만

10년 사업기간 단축 2030년 ⇨ 2020년

- 국제과학대학원 /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 고려대 / 카이스트 유치
- 삼성 / 한화 / 웅진 / 롯데 / SSF(오스트리아 기업) 유치
- 16개 국책연구기관 / 정부전산백업센터 이전
- 오송 / 오창 / 대덕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2년까지 모든 사업 착공
- 광역교통망 2015년까지 조기 건설

부는 이번 발전 방안에서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 초석 마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 조성 완료 시점은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이에 맞춰 도로 등 도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시점도 2030년에서 2015년으로 15년 단축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 조성 10년 당겨 2020년 완료… 관련 법 재정비 나서

이번 발전 방안에는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 과학, 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 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 확산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 전략도 포함돼 있다.

우선 토지이용으로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기존의 6.7퍼센트에서 20.7퍼센트로 확대(4백86만 제곱미터 → 1천5백8만 제곱미터)한다. 아울러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 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 가구), 주변지역에 10만명(4만 가구)으로 나눠 수용한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25만 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할 방침이다.

첨단 과학 연구거점, 첨단·녹색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 기반 등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5대 거점도 구축된다. 원안에는 없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부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 안정화 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3.3제곱미터당 78만원)에서 개발 비용(3.3제곱미터당 38만원)을 뺀 가격(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으로 한다.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 오창, 대덕 등의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감안해 3.3제곱미터당 50만~1백만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 부지는

> **첨단 과학 연구거점, 첨단·녹색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 기반 등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5대 거점을 구축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우수한 정주여건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3제곱미터당 1백만~2백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세제 지원도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 세종시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테면 외국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신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백 퍼센트, 추가로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러한 원칙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도 활성화된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과 함께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된다. 또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인 미술관, 뮤직홀 등의 투자를 유도하고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할 계획이다.

자족용지 확대… 토지이용으로 2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세종시 입주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2012년 이전에 설치하거나 유치토록 지원하고,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특목고와 외국인학교를 각각 1개교 이상 설립하는 등 우수한 교육 기반시설도 갖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 복지, 주거, 쇼핑 등 각종 생활 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도시 내 어디서나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 교통체계도 구현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전 등 광역교통의 주요 지점 연결도로는 2013년까지 완공하고, 원안에선 2017년 이후로 계획됐던 공주시, 청원IC, 청주시, 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한다. 발전 방안의 2020년 조기 도시건설 계획에 맞춰 도로교통의 중심순환도로는 2015년에서 2013년까지로 2년을 앞당기고, 외곽순환도로는 2030년에서 2015년까지로 15년을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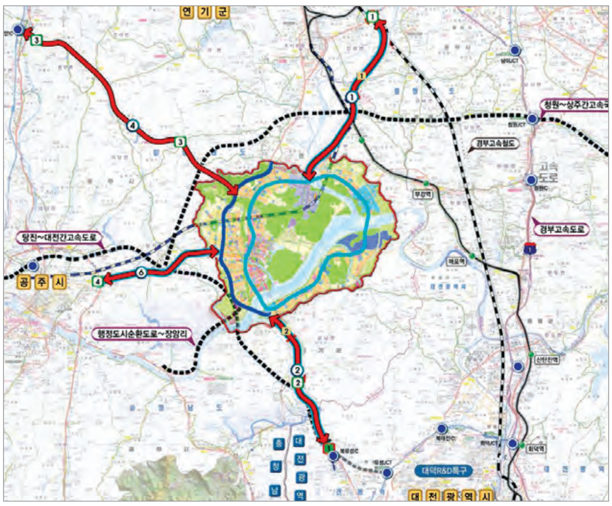
소액 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보강된다. 정부는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주민이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제곱미터·5백 가구)에 2011년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백 가구를 추가 건립해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 가구를 모두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백 가구·1백억원) 외에 재정으로 1백 가구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 시기도 2012년 말에서 2011년 말로 당겨 홀몸노인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백 퍼센트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정부는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 이들을 최우선으로 의무 고용토록 하고, 민간 기업에서 원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는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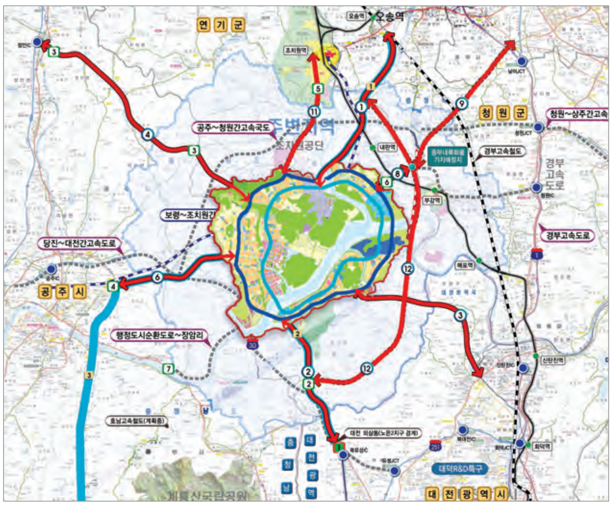
신설도시의 인구 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입주기관들이 창출하는 자족기능 고용이다. 세종시기획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망 비교

원안의 광역교통 계획도(2015년)



발전 방안의 광역교통 계획도(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그러나 기존 세종시 원안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족기능 고용은 2만9천명 수준. 이에 따른 유발 고용도 5만5천명에 불과한데다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 유입기능이 저조해 사업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총 인구수는 17만명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만6천명에 달하며 20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유발 고용도 15만8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원안과 비교하면 발전 방안의 고용 창출 효과가 3배나 높음을 알 수 있다.

신규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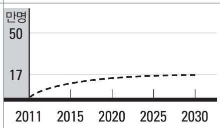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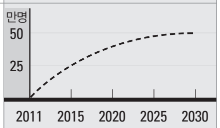
더구나 원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 면적이 2백58만 제곱미터인데 반해 새롭게 마련된 발전 방안은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해 이미 3배가 넘는 9백1만 제곱미터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확정된 투자 규모도 원안의 8조5천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조5천억원(재정 8조5천억원+과학벨트 3조5천억원+민간 4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발전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원안보다 평균 10배 높은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발전 효과도 발전 방안이 원안보다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발전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세종시가 202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존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 방안 마련이 불가피했다"며 "세종시를 경제허브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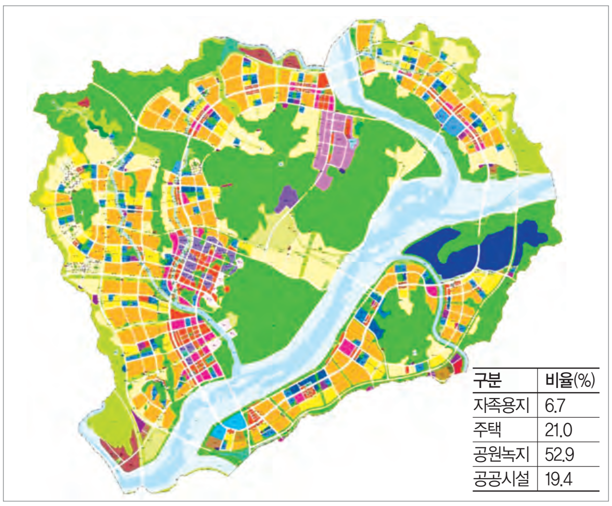
글 · 김지영 기자

원안과 발전 방안 종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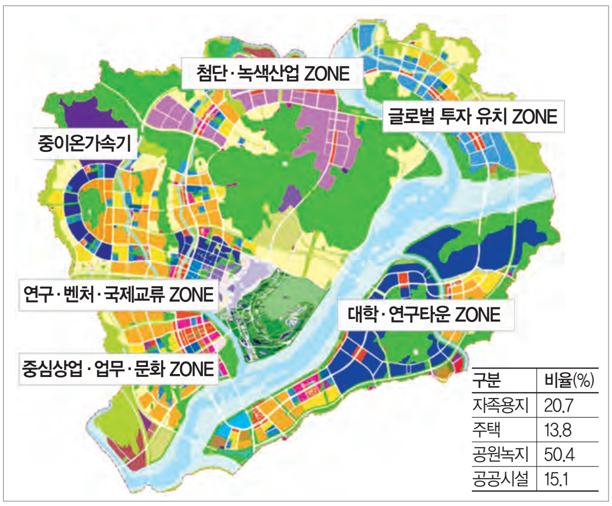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 방안
개요	도시 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 기간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20년까지 집중 개발
	목표 인구	50만명	50만명(예정지역 40만+주변지역 10만)
토지 이용	주요 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퍼센트	20.7퍼센트
인구	총고용	8만4천명	24만6천명(원안의 약 3배)
	거점 고용	2만9천명	8만8천명
	유발 고용	5만5천명	15만8천명
	총인구	17만명	50만명
	인구 유입 속도		
인센티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부지 공급 :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 · 원형지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 · 조성지 3.3제곱미터당 50만~1백만원 · 연구소 3.3제곱미터당 1백만~2백30만원 ▸세제 지원 : 기업도시 수준 ▸규제 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 면적 (고용 인구)		2백58만 제곱미터 (1만6천7백70명) * 대학(원)생 3천1백65명 별도	9백1만 제곱미터 (3만6천2백44명) * 대학(원)생 7천1백명 별도
도시 교통	중심순환도로	2011~2015년	2011~2013년,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2011~2030년	2011~2015년, 15년 단축
광역 교통	주요 광역도로	2011~2017년 이후(미정)	2011~2015년, 2년 이상 단축
투자 규모		국고 8조5천억원 한도	▸국고 8조5천억원 한도 + 과학벨트 3조5천억원 ▸민간투자 4조5천억원

토지이용 비교

원안의 토지이용 계획도



발전 방안의 토지이용 계획도





세종국제과학원 안에 설립될 첨단 융·복합연구센터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원자력, 우주, 핵융합 등 거대 과학분야 연구를 맡는다. 인공태양이라는 불리는 핵융합장치 KSTAR가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과학 노벨상' 꿈★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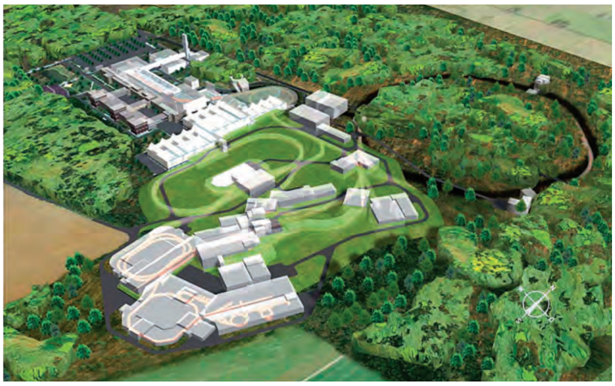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2015년까지 3백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융·복합연구센터 등 과학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2백12만명의 고용 창출과 2백36조원에 이르는 생산을 유발해 제2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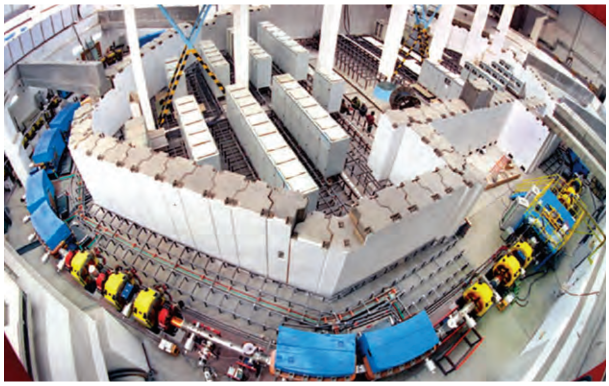
대한민국 百年大計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가 독일의 드레스덴, 미국의 RTP(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와 같은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세종시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융·복합연구센터 등 과학 연구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삼성, 한화 등 국내 대기업과 벤처형 중소기업이 연계하는 첨단 지식산업군을 형성하는 한편,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입주로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 바이오 메디컬 분야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선 △도시 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결돼 있어 연계 발전하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 발전 여건이 우수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세종시에 대학, 연구소, 기업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도시가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내 최대의 기초·응용연구소가 모인 대덕, 생명과학과 첨단 의료 분야의 중추가 될 오송, 오창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대구, 울산 등의 동남권과 전주, 광주 등의 서남권, 천안과 원주 등 중부권으로 경제발전이 확산되고 수도권과도


동아DB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와 실험을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기초 과학종합연구기관과 대형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의 의견이다. 독일의 GSI연구소(왼쪽)와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오른쪽).

연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자족기능 완성,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존 세종시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의적 과학혁신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응용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투자에 주력해왔고, 그 결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추격 위주의 전략에 바탕을 둔 시스템으로는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 창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일본의 리켄연구소,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에 필적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로 세종국제과학원이 세워진다. 세종국제과학원은 3백30만 제곱미터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첨단 융·복합센터 등이 들어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까지 3조5천4백87억원을 투자해 기본시설 건립을 마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고위험, 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해 창조적 과학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 전체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발 기간이 수십 년씩 걸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를 수천 명의 과학자가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대덕연구단지 연계·우수 연구 인력 확보 용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편경범 추진단장은 "그동안 투자가 적었던 기초연구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세종시에 본원을 두고 전국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사이트 랩)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가속해 생겨나는 원자의 변화를 이용해 1천조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펨토 세계를 연구하는 중이온가속기 연구소는 우주물리, 원자력,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에너지 및 빔 전류 성능으로 국제적 연구 네트워킹 및 우수 인력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건설 단계부터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ANL) 등과 협력하여 해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최고 수준의 과학·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첨단 지식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20년간 21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236조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첨단 융·복합연구센터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원자력, 우주, 핵융합 등 첨단 융·복합 거대과학 분야의 연구를 맡게 된다. 첨단 융·복합센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설립되지만, 국내 곳곳에 흩어진 기존의 대학과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간 연구 역량을 총집결시켜 세계 5위 안에 드는 연구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1천8백명 규모의 국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모은 국제과학대학원도 설립된다. 국제과학대학원은 기초 원천 기술과 국가 주도 거대과학 기반의 첨단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교수와 학생 모두 외국인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개도국의 우수 인재를 우선 유치하며, 외국 명문 대학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학생들에게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경영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에 따르면 세금 감면과 교육·의료기반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세종과학원의 연구 성

동아DB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금융시설이 들어선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상상도.

과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금융센터를 세워 기술 사업화, 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일괄 지원한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기초과학연구원과 국제과학대학원 등에 3천8백명의 인력이 고용되고 첨단 지식산업단지에는 1만6천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향후 20년간 2백12만2천명의 고용 창출과 2백35조9천억원에 이르는 생산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세종과학원을 중심으로 충청권의 대덕, 오송, 오창을 연결하는 C벨트와 서울, 광주, 강릉, 대구, 부산 등을 연결하는 K벨트를 형성해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소와 첨단 융·복합연구센터 연구단을 대구, 울산, 포항, 부산 등 동남권과 천안, 아산, 충주, 원주 등 중부권, 전주와 광주 등 서남권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의 소재산업,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자동차산업, 광주의 광산업, 아산의 LCD산업, 원주의 첨단 의료기기산업 등을 고도화하거나 첨단 지식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최고 수준의 과학교육의 기회와 높은 연봉의 첨단 지식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면 노벨상 수상도 기대해볼 만하다.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이사장은 “일본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13명이나 되는데 우리나라엔 하나도 없는 이유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로 과학계의 체질이 바뀔 것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순조롭게 만들어지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암초는 법안 통과 여부다.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심사에 올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수정안과 한데 묶이면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공산도 크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세종국제과학원을 골자로 한 과학벨트 거점지구(연구기관, 대학, 기업, 금융)와 기능지구(대덕, 오송, 오창)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수정한 뒤 다시 국회로 보내진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인프라로 과학발전 혁신 일으킬 것”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융·복합연구센터와 관련해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용수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리켄연구소나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같은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종합연구기관이 없다”며 “중대형 융·복합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할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나인광 과학기획팀장은 “대덕연구단지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인력이 몰려 있고 특히 출원 건수도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단기성과 위주의 응용연구 개발을 담당하므로 기초과학 연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로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하고 삼성, 한화 등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한다면 산업기술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동필 이사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데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 창출이 절실한데, 세종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과학 발전의 전조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뭔가요?

"기초과학 투자로 국가 성장 발판 마련"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 행정중심도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별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 수준의 연구 거점을 조성해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와 연계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는 별개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왔으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발전 방안의 일부로 건의한 것이다.

| 조성 시간 단축할 수 있다 |

기초과학 연구의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줄기세포에서 세포치료제가 개발되고 특이유전체에서 바이오칩(생체기능을 모방한 인위적인 소자)을 생산하는 것처럼 기초·원천기술이 바로 사업화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일본의 리켄연구소는 2007년 기준 특허등록이 6백 건,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는 2006년 기준으로 기술료 수입이 8백만 유로(1백35억원)에 달한다.

|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함께 추진 |

대덕연구단지는 응용·개발기술 개발을 주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최근 들어 사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조성 단계에서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에 지적재산권 전략센터를 설치하고 기술평가 지원,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지원, 기술금융, 사업화 멘터링, 사업화 코디네이터 양성 등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종합연구기관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개별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므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 역시 대형 연구시설이 부족하고 교수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가 중심이 되어 기초·원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리켄연구소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같은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종합연구기관이 없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수행하기 힘든 중대형 융·복합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 정부 출연 연구소나 대학과 기능적인 연계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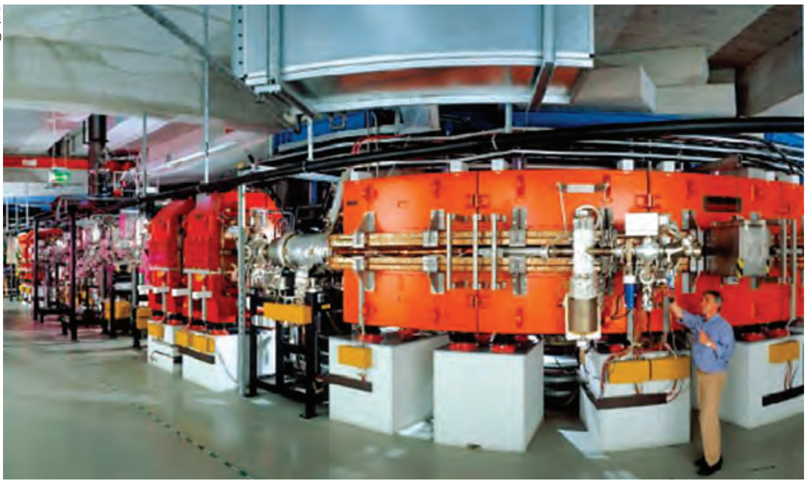
| 중이온가속기는 '팔방미인' |

노벨 물리학상의 20퍼센트가 대형 연구시설인 가속기 기반 연구이며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대형 연구시설 중 가속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면 우수 인력 유치의 구심점 노릇을 할 것이고,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가 이뤄질 것이다.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하면 펨토(1천조분의 1미터) 수준의 극미세 분야 연구가 가능하다.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등 미래 청정에너지 연구, 중이온을 이용한 암치료 기초연구 등 의학 분야, 세포생물학적 연구, 유전자 및 돌연변이 연구, 생체고분자 구조분석 연구 등 바이오 분야, 중이온 융합 물질분석법 개발, 신소재 반도체 개발, 고온 초전도체 연구 등 재료·물성 분야, 미지의 원자핵·원소 합성 등 원자·분자 물리 분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면 세계 우수 인력 유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사진은 독일 GSI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암 치료 · 전력 생산 · 원천 기술 보유의 새 場

중이온가속기 'KoRIA' 펨토 시대 연다

(1천조분의 1미터)

정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핵물리, 천체물리, 원자력, 생물, 의학, 원자 및 고체물리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목적 연구 기반시설이다.

세계 최고 성능의 중이온가속기는 해외 석학 유치의 구심점이자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의 상징적 아이콘이다. 노벨 물리학상 중 약 20퍼센트가 대형 가속기와 관련이 있어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기초과학 및 원천 기술에 이용되는 대형 가속기 설치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0여 기의 대형 가속기가 운영 또는 건설 중이며, 그중 중이온가속기는 5기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5년까지 4천6백억원을 들여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건설될 중이온가속기 'KoRIA(Korea Rare Isotope Accelerator)'는 에너지 2백 메가전자볼트(MeV)로 중이온가속기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대 연구시설을 포함할 경우 웬만한 축구경기장의 몇 배 이상 되는 면적을 차지해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 과학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대형 가속기 조기 투자로 세계시장 선점 가능"

중이온가속기는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이온과 불안정한 핵종을 고에너지로 가속시켜 다른 원자핵에 충돌시킴으로써 원자 이하 크기의 펨토(1천조분의 1미터) 세계를 연구하는 거대 과학장비다. 이를 통해 원자핵이나 소립자(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관찰하거나 새로운 입자를 만들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국내 원자력 에너지 이용률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40퍼센트에 그쳤지만,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경우 폐기물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또 중이온가속기를 통한 연구 결과로 다양한 핵자료가 지원되면 원자력 에너지 연구와 활용에서 세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가속기 운용으로 발생하는 중이온 빔은 X선 등 방사선 이후 가장 혁신적인 암 치료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환부에 최소 오차 이내로 발사할 수 있어 주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미세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벨트에 설치될 KoRIA는 첫 번째 가속으로 만들어진 초단수명(超短壽命) 동위원소(원자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 빔을 다시 가속해 매우 희귀한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다. 외국의 중이온가속기보다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중이온가속기 KoRIA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KoRIA 상상도.

따라서 KoRIA가 설치되면 국내외 최고 두뇌들이 가속기를 통한 연구를 위해 모여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중이온가속기 국제 워크숍'에는 가속기 연구로 유명한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KoRIA에 많은 관심을 표시했다.

가속기와 같은 최첨단 연구시설을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고무적인 일이다. 가속기 건설에는 초전도, 진공, 초정밀 센서, 무선주파수(RF) 기술, 다양한 컴퓨터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히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oRIA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의 개발과 연관 산업의 육성이 이뤄지게 된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김용균 교수는 "KoRIA 건설은 그동안 가속기가 있는 외국에 나가서 연구를 해야만 했던 국내 과학도들이 꿈꿔오던 일"이라며 "가속기를 통한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는 한국의 과학적 위상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중이온가속기 수소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이온과 불안정한 핵종을 고에너지로 가속시켜 다른 원자핵에 충돌시킴으로써 원자 이하 크기의 펨토(1천조분의 1미터) 세계를 연구하는 거대 과학장비다. 이를 통해 원자핵이나 소립자(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관찰하거나 새로운 입자를 만들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 과학 수준 크게 높일 것”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 부소장 김영기 박사

미국 시카고에 있는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입자물리학 연구소다. 1977년 자동차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한국인 천재 과학자 고 이휘소 박사가 이론물리학 연구부장으로 일하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 연구소의 부소장은 한국인 김영기(48·시카고대 물리학과 교수) 박사다. 김 박사는 고려대 물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박사는 2000년 과학전문지 〈디스커버리(Discovery)〉가 선정한 ‘21세기 세계 과학을 이끌 과학자 20인’에 포함됐고, 2004년엔 미국 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APS)의 최고 영예인 APS 펠로로 선정된 바 있다.



동아DB

김영기 박사는 “과학벨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초 한국을 방문한 김 박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과학 수준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과학 클러스터(Cluster), 즉 각종 기초·응용과학 연구소들이 몰려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현재 없는 중이온가속기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설치하면 기초과학과 첨단과학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가 있으면 핵 원소와 희귀 원소의 생성 등을 알 수 있고, 암도 치료할 수 있는 등 그 연구와 응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40대에 연구소 부소장이 된 비결은.

1990년 UC버클리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페르미 연구소의 ‘양성자·반양성자 충돌실험 그룹(Collider Detector at Fermilab·CDF)에 참여했다. CDF의 소그룹 팀장을 맡아 실험하면서 톱쿼크(소립자의 한 가지)를 발견했고, 2004년엔 임기 2년의 CDF 대표로 선출됐다. CDF 대표 임기를 마칠 무렵인 2006년 부소장(임기 5년)으로 승진했다. 연구도 연구지만 맡은 조직을 나름대로 잘 이끌었던 게 평가를 받은 모양이다. 뉴턴이 있었을 때는 혼자 과학을 하는 시대였지만 요즘엔 과학자끼리 협력을 잘해야 한다. 고려대에 다녔을 때 탈춤반 활동을 했는데 그때 남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알게 모르게 개발된 것 같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다수 행정기관의 이전이 옳은지 그른지 답하기 어렵다. 강조하고 싶은 건 과학벨트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과학벨트를 건설하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정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 어느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에 과학벨트를 세우면 좋겠다.

한국 정부는 세종시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가속기란 무엇이며, 그걸 설치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가속기란 아주 성능이 좋은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전하(電荷)를 띤 입자를 넣으면 아주 빨리 움직인다. 가속기를 쓰면 지금 지구상에는 없는 반입자(Antiparticle)를 만들 수 있다. 우주가 진화하면서 반입자는 없어지고, 입자만 남은 만큼 가속기를 이용하면 초기 우주가 어떤 상태였는지 연구할 수 있다. 또 재료공학, 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에 큰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 사람은 성과를 빨리 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기초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참을성 있게, 진득하게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또 기초과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대형 실험장치를 보유한 연구소들을 많이 건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개방해야 한다. 페르미 연구소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

글 · 이상일(중앙일보 정치데스크)



1월 14일 세종시 입주예정 대학과 기업의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장순흥 카이스트 부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 김순택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 이인원 롯데 정책본부 사장, 이주석 웅진그룹 총괄부회장.

고려대·카이스트·국제과학대학원…

세계 과학 인재가 모인다

우수한 교육여건은 세종시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 필수 요소다. 정부는 대학과 대학원, 특목고 등을 유치해 글로벌 인재 육성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이미 카이스트, 고려대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우수 고교들도 설립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百年大計 세종시
교육도시

"이 양해각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 개발하고 충청남도 연기·공주 지역에 건설 중인 세종시 내에 '한국과학기술원'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족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세종시에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관한 가운데 세종시에 입주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장순흥 부총장이 한국토지공사 이지송 사장과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신속한 세종시 입주를 위한 계획 수립을 약속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제도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월 14일 현재까지 세종시 입주가 확정된 대학은 고려대와 카이스트 두 곳.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서울대도 전략팀을 꾸려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종시를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청사진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 외에도 외국대학 분교, 공사립고, 특목고, 국제고 등 우수 고교를 유치해 스쿨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고 수준 환경 조성… 우수 고교 유치해 스쿨 타운으로

세종시 동남쪽 제3, 4생활권에 조성될 대학 부지는 3백50만 제곱미터. 이는 세종시 전체 면적의 4.8퍼센트로, 세종시 원안(2.2퍼센트·1백60만 제곱미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면적이다. 여기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학생 수는 7천1백명으로 추정되며, 원안(3천1백65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려대는 입주가 확정된 총 1백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6천12

억원을 투자해 연구 중심의 이공계 대학원을 설립한다. 이곳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녹색기술 융·복합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대학원 시설 외에도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초·원천기술연구소와 함께 기술 지주회사, 벤처 타운도 입주한다. 이공계 대학원에는 연간 9백명이 입학하며, 대학원생 수는 3천6백명으로 예상된다.

카이스트의 경우 총 1백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7천7백억원을 투자해 생명과학기술대학 및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수용 예상 학생 수는 1천7백명. 또한 과학기술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 및 융합연구대학원, 산학연 협력단지, 국제화 기반시설도 들어선다. 카이스트 발전재단의 관계자는 "현재 10명의 교수진이 세종시 입주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위원회에 과학 분야별 교수들을 추가 영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가 불확실한 상태이던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이처럼 입주를 전격 확정한 것은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덕분이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의 경우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지 형태로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 부지는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의 저렴한 가격이며, 대학의 공익성을 감안해 세종시 입주 기업보다 10퍼센트 더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재정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정부 특별회계에서, 교육·연구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에도 사학진흥기금 시설융자 지원 사업을 특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정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도권 학교에 비해 정원을 유동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서울대도 조만간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을 전담할 전략팀을 구성해 세종시 입주를 추진한다. 서울대 주종남 기획처장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운다는 정부 계획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달 안에 초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입주하기로 한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의 세종시 입주는 주변 지역의 대학들에도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아DB

국제과학대학원에는 국내외 우수한 이공계 인재 1천8백명이 모인다.
사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외국인 과학자들.

이처럼 대학들이 세종시 입주를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 세종시추진기획단의 서종대 부단장은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입주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 부단장은 "지난 정부에서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추진할 당시 고려대는 세종시에 행정 분야와 정책학 분야 연구를 갖고 올 계획이었다가 이번에 이공계로 방향을 바꿨다. 카이스트는 기존 대덕에서 다루지 않는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 등을 세종시에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 1800명 집결 '국제과학대학원'도 들어서

카이스트 발전재단 관계자는 "카이스트가 세종시에 입주하면 주변 지역의 대학도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등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카이스트 개교 이후 충남대 공대에도 우수한 인재가 모임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입증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카이스트와 별도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대학원이 2011년 착공된다. 국제과학대학원은 국내외 우수 이공계 인재 1천8백명이 집결하며, 원천 기술과 국가 주도 첨단 융·복합 연구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 대학원은 교수와 학생의 외국인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협조를 받아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명문 대학과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교환학생을 파견하며, 학생들에게 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경영 교육을 의무화해 산학 연계 연구를 내실 있게 실행한다.

세종시에 우수 고교를 유치하는 '스쿨 타운'도 조성된다. 우선 2011년 개교를 목표로 15학급, 3백명 규모의 외국어고 설립이 추진된다. 2012년까지는 9학급 1백80명 규모의 과학고가 문을 연다. 또 같은 해 15학급 3백명 규모의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가 각각 1곳씩 들어선다. 2013년까지는 세종시 아트센터와 연계하는 예술고 1곳이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치를 위해 고려대나 카이스트가 국제고 또는 외국인학교를 2013년까지 1곳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과 협의해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 개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고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명으로 제한하며, 유비쿼터스 교육 시스템, 교과교실제, 무학년(無學年)제를 갖추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성된다. G

글·최은숙 기자



전남 영암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태양 에너지는 그린 에너지의 기초가 된다. 삼성, 한화 등 기업들은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 등 그린 에너지 관련 연구를 세종시에서 지속할 예정이다.

전체 에너지 15% 신재생에너지로

녹색 바람 부는 '그린 세종시'

세종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첨단·녹색산업의 대표 도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친환경 첨단 산업을 이끌 주요 기업들의 유치를 확정하고 성장과 환경이 균형된 녹색도시 계획도 마련했다.

대한민국 百年大計, 세종시
첨단녹색산업도시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첨단 과학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되는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세종시의 주목할 만한 도시적 특징은 산업, 학교, 연구소 등 산학연의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첨단·녹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기업도시의 면모와 함께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기능을 아우르게 된다.

세종시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과학·연구·국제교류지구 바로 옆 동쪽에 첨단·녹색산업지구를 마련했다. 3백47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를 비롯해 외국 기업으로 오스트리아 태양광 기업인 SSF가 투자를 확정했다. 2020년까지 4조5천1백50억원을 투자할 이들 5개 기업은 2만2천9백9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낼 전망이다.

첨단·녹색산업 연구단지 대규모 단일부지 조성

삼성은 국내 우선 투자를 목적으로 신사업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단일부지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얻게 되는 세종시를 투자 적지로 선택했다.

삼성은 세종시 부지 1백65만 제곱미터에 2조5백억원을 투자한다. 세종시에 유치되는 국내외 나머지 4개 기업이 계획한 총 투자액의 절반 정도다. 고용 인력은 1만5천8백명에 달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와 삼성SDS를 비롯한 5개 계열사가 태양광 발전, 연료용 전지, 발광

동아DB



국내외 기업 투자 현황

	사업 내용	투자액	면적	고용 인력
삼성	그린에너지(태양전지, 차세대 전지, LED조명 증축), 헬스케어 등	2조5백억원	1백65만m²	1만5천8백명
한화	태양광 R&D센터, 태양전지 생산공장 등	1조3천2백 70억원	60만m²	3천44명
웅진	태양광 공장, 시스템 공장, 환경가전 공장, 교육센터 증설 등	9천억원	66만m²	2천6백60명
롯데	식품바이오 연구소 등	1천억원	6만6천m²	1천명
SSF	태양광 공장, 연구개발센터 등	1천3백80억원	16만5천m²	5백명

친환경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세종시에 들어오면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다.

삼성은 이 가운데 대표적인 첨단·녹색산업인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는 차세대 전지와 LED 조명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삼성이 그린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1조1천2백억원 정도로 고용 규모는 1만1백명 정도로 예상된다. 차세대 전지는 삼성SDI가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 및 연료전지,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삼성SDI 천안공장 등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발광다이오드 조명사업은 삼성LED가 연간 생산능력 1억원대 규모의 조명 엔진 생산기지를 만들어 차세대 조명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태양광 전지 등 친환경 분야 적극 투자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을 융·복합한 첨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부문에는 3천3백억원이 투자된다. 관련된 고용 규모는 1천명 선으로 예상되며 인근 오송, 대덕단지와 연결되면 '글로벌 클러스터'로 발전하리라 기대를 모은다. 이렇듯 앞으로 삼성이 투자하게 될 그린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될 경우 국가 미래 신산업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화는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밀 유도무기와 첨단 센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국방미래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1조3천2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 전지 공장과 태양광 연구개발센터도 입주시켜 3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웅진은 친환경 태양광 기업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주요 3개사의 생산 시설을 세종시에 증설한다. 이에 세종시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9천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생산시설 외에도 통합 연구개발(R&D)센터와 그룹 교육센터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는 식품 바이오연구소 설립에 1천억원을 투자해 발효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인 대기업에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3.3제곱미터당 36만~40만원에 제공한다. 또 소득·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 등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했다.

한편 세종시의 첨단·녹색산업지구에 입주할 기업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 규모 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시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이 되는 도시로 계획했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처음 제기됐다. 녹색도시는 친환경 도시, 주민참여 도시, 저투입 고효율성 도시, 정보화 도시 등의 여러 개념을 인식하면서 환경 보전에 힘쓰게 된다.

이에 세종시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15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생활폐기물 관로 수송 및 연료화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다. 또 중앙공원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해 4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는 등 문화,휴양, 레저 등이 복합된 녹색공원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입주한 연구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도시 안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등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G

글 · 김민지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외 자본 '유혹'

국제교류단지 신설 등 글로벌 투자 기반 강화

세종시가 국제적인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하려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투자유치단지와 국제교류단지를 신설해 세종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百年大計 세종시
글로벌 투자 도시

완공될 세종시의 모습은 중앙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각종 기능들이 늘어서 마치 도넛 같다. 첨단·녹색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상업업무단지, 대학단지, 국제교류단지, 글로벌투자유치단지가 고리 형태로 연결돼 있다. 이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서 강조한 교육, 과학, 경제, 녹색, 글로벌 기능 등 5대 거점 기능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 중에서도 세종시를 '자족형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은 '글로벌 투자 기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연계에 힘입어 생산된 첨단·녹색산업의 성과물들이 세종시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에 전달되면 글로벌화는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녹색산업단지 바로 옆에 '글로벌투자유치단지'를 마련했다. 1백90만 제곱미터 크기의 글로벌투자유치단지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국적기업의 본사, 연구소, 첨단 생산시설 및 해외 유명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더 좋은 외국 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남겨둔 지역이기도 하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외국 기업 유치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세종시 기획단 한경희 사무관은 "세종시에 별도의 외국인 특정지역을 블록화해 지정한 것처럼 세종시는 외국의 투자 유치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DB

세종시에는 글로벌투자유치단지와 국제교류단지 등이 들어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어우러지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 외국 투자 유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현재 기업도시에 부여하는 혜택을 그대로 적용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퍼센트 면제하다가 이후 2년간 50퍼센트 면제하고,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세종시 원안에는 글로벌 투자와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글로벌투자유치단지와 국제교류단지는 이번 발전 방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두 단지 모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끈다는 특징을 지니면서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기능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투자기업에도 재산세 15년 감면 등 기업도시 혜택 적용

글로벌투자유치단지는 세종시 외곽에 자리 잡아 외국 기업, 학교, 아파트 등 주거·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국제교류단지는 세종시의 심장부에 자리해 '리틀 제네바'로 불리게 된다. 스위스 제네바는 유엔 유럽본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집결돼 있어 스위스 수도인 베른보다도 유명한 도시다. 여기에 레만호(湖)의 아름다운 풍경과 도시를 메우는 다인종·다국적 주민들 때문에 늘 손꼽히는 인기 여행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종시 국제교류단지를 '리틀 제네바'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세종시를 제네바와 맞먹는 국제적 도시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도시 중심부 30만 제곱미터 크기의 국제교류단지에는 교육·과학 관련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교류단지에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이 강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과학·의료 관련 기자재의 상설 전시를 위한 종합전시장과 호텔 및 상업시설도 구비할 예정이다.

'리틀 제네바' 옆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외국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원안에는 공원으로만 계획됐던 2백80만7천 제곱미터 규모의 중앙 녹지공간이 호수공원과 수목원, 국립도서관, 테마파크 등과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중앙공원 내 개방형 수목원이 연구교육시설을 포함해 1백만 제곱미터 크기로 조성되고,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갖춰진 호수공원과 암벽 등반과 같은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테마파크 등도 들어서게 된다.

> **글로벌투자유치단지와 국제교류단지는 모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끈다는 특징을 지니면서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기능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아파트 등 주거·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동아DB

외국인들이 좀 더 편하게 세종시에서 살기 위해 외국인 진료 병원을 만들고 외국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이 모인 대규모 문화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의 박물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함께 천연 약재 박물관을 만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천연 약재들을 이곳에 보존하고 전시하면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인 독일의 태양광 인포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태양광 인포센터를 모델로 만들어지는 이 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컨설팅 교육 등이 가능하다.

외국인 거주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언어 소통' 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할 방침이다. 세종시 곳곳에 외국어 표지판을 설치하고 영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의 개인적 선호를 고려해 여러 나라의 주거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주택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게스트하우스나 전원주택도 마련된다. 세종시 기획단 한경희 사무관은 "외국인 진료 병원을 만들고, 외국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편의 서비스도 준비해 외국인들이 살기에 편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외국자본 투자 단지 비교

글로벌투자유치단지	국제교류단지
위치 | 5 생활권 일대	**위치** | 1–5 생활권 일대
규모 | 1백90만 제곱미터	**규모** | 30만 제곱미터
고용 | 1만9천3백명	**고용** | 5천5백명
주요 시설 | 산업, 교육, 연구, 문화, 의료 등	**주요 시설** | 기업 입주, 종합전시장, 컨벤션 등
조성 방향 |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큰 해외 투자자 적극 유치	**조성 방향** | 국제기구 유치 통해 '리틀 제네바'로 육성,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 영어 공용화 지구 지정

기업·대학·연구소 결합한 미래 도시로

獨 드레스덴·美 RTP·스위스 CERN 등 세계 과학비즈니스 도시 성공기

앞으로 10년 뒤 세종시는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거듭난다. 이런 세종시의 미래상을 짐작케 할 해외 모델도시들이 있다. 독일 드레스덴, 미국 RTP, 유럽 CERN이 그들. 세종시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이들 도시의 면면을 살펴봤다.

2020년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경제도시로 탄생한다. 세종시 발전 방안대로 세종시가 육성되면 세종시는 산업, 대학, 연구 기능이 어우러진 인구 50만명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장한다.

세종시는 교육, 과학, 산업 등 5대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첨단 과학 연구 거점' 기능. 세종시 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 연구가 가능하고 과학 비즈니스를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모델도시들을 벤치마킹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벤치마킹 대상이 된 도시들은 독일 드레스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 스위스 제네바 체른(CERN) 등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 벤치마킹 도시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된 곳은 드레스덴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됐던 옛 동독 치하의 드레스덴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인구의 15퍼센트가 실업자였을 정도로 암울한 도시였다.

그러나 통독 후 정부 주도로 기초과학 연구소를 유치하고 5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지식 기반의 도시화를 주도하면서 20년만에 구 동독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현재 인구 50만명인 드레스덴에는 재학생 약 3만5천명으로 독일 최대 기술대학인 드레스덴 공대 등 10개 대학과 3개 막스프랑크연구소, 5개의 라이프니츠연구소, 10개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자리해 있다.

또한 독일 정부와 작센주의 기업유치 노력에 힘입어 드레스덴에는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뿐 아니라 AMD, 인피니온 등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입주했다. 현재 1천2백여 개 기업이 4만2천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덕분에 드레스덴은 유럽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빗대어 '실리콘 작센'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구 15%가 실업자"… 20년 만에 '실리콘 작센'으로

드레스덴의 성공 비결로는 오랜 역사와 문화, 축적된 산업 지식 등이 꼽히고 있다. 8백 년 전통의 드레스덴은 한때 동유럽의 문화 중심지이자, 통독 전부터 기계, 화학 등 전통산업이 발전한 경제 중심지이기도 했다. 여기에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주도하는 산학연의 강한 연계와 편리한 주거환경이 더해지면서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RTP 역시 세종시의 모델도시로 검토된 바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952년 1인당 주민소득이 1천49달러로, 당시 미국 평균 1천6백39달러에 한참 못 미칠 만큼 미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었다. 그러나 1959년 더램, 채플힐, 롤리 등 3개 도시의 가운데에 있는 2천8백3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구삼각지대(Research Triangle Park)'를 들이면서 이 도시의 운명은 바뀌었다.

미 국립보건원 산하 환경보건연구소 등을 시작으로 주요 연구소가 잇따라 들어선 RTP는 IBM, 시스코 등 1백70여 개의 글로벌 첨단 기업



독일 드레스덴 막스프랑크연구소.
드레스덴은 오랜 역사와 문화, 축적된 산업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과학도시가 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를 관리하는 RTP재단 사무소. 세종시의 모델도시 중 하나인 RTP는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을 유치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로 변모했다. 오늘날 RTP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 고용의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자본투자액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RTP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도 드레스덴처럼 산학연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유능한 인력이 계속 배출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RTP 인근에는 '남부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사립 명문 듀크대, 제약 및 화학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는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엔지니어링 부문에 강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CSU)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RTP는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계기로 오는 2020년에는 서부의 '오리지널' 실리콘밸리를 뛰어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다.

첨단 기업·대학·과학기술연구소 유기적 연계가 해답

스위스 제네바 CER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의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54년 유럽 12개국이 핵과 입자물리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로 세계 최대의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CERN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국 출신 7천여 명의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엔지니어들도 7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다.

1994년 CERN은 29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자가속기를 완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백37억 년 전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의 비밀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ERN의 이처럼 축적된 기술은 2012년 세종시에 착공될 중이온가속기 연구소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CERN을 비롯해 미 아르곤국립연구소(ANL), 미시간주립대(MSU)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건설돼 물리, 생명과학 등 기초과학과 재료, 원자력·에너지 분야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드레스덴, RTP, CERN 등 해외 과학도시들의 성공 사례는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들 도시의 성공 포인트는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첨단 기업과 우수 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소를 끌어들인 산학연의 협력관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초과학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또 우수한 인력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세종시가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러한 모델도시들의 장점을 속속들이 파악해야 한다. 과학 발전을 통한 성급한 경제효과만을 기대하기보다 향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해가기 위한 근본적인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G

글 · 김민지 기자

“여보, 세종시 오기 참~ 잘했다”

2020년 날개 단 세종시 가상 시나리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이기도 한 세종시의 미래는 과학,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창조도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글로벌 생활환경이 갖춰진 국제도시다. 도시 조성이 완성되는 2020년, 세종시의 모습을 미리 둘러봤다.

원주민 김희망 씨

영구임대아파트에 자녀취업까지 한 방에 해결했죠

“행복아파트에는 행복이 산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온 아담한 규모의 농지가 세종시 부지에 편입돼 한동안 대토(代土) 농사를 짓던 농부 김희망 씨. 2020년 새해를 맞은 김 씨의 기분이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 전 김 씨가 입주한 세종시 행복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널찍한 녹지대의 겨울나무들은 벌써 푸른 여름날을 꿈꾸는 듯합니다.

김 씨가 기분 좋은 이유는 그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고생이 원주민용 행복아파트 입주로 ‘한 방에’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허리를 다쳐 농사일이 힘들었던 김 씨가 주민생계조합을 통해 세종시 안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찾은 것도 기분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참, 가장 흐뭇한 것은 그의 딸이 올봄 세종시에 있는 특목고에 입학한다는 것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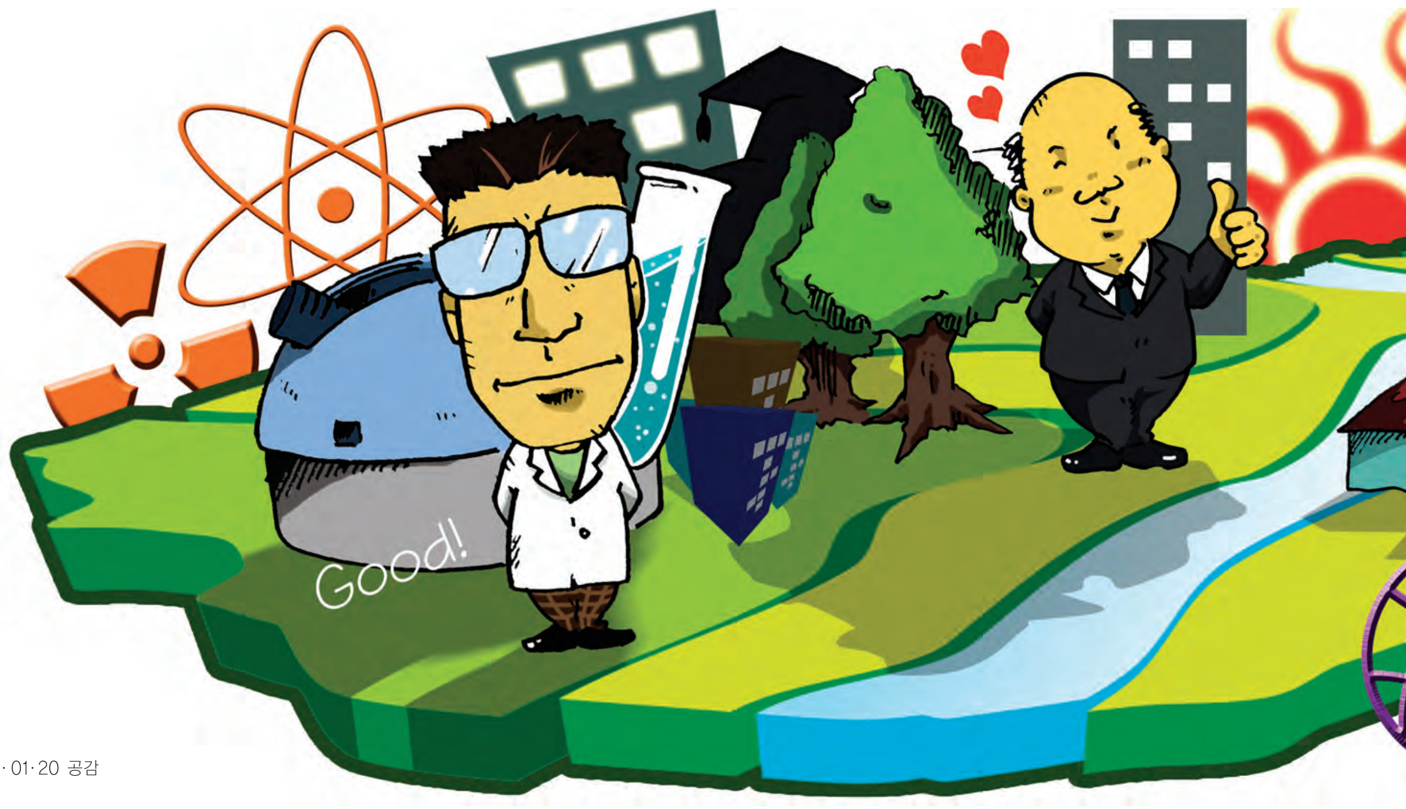
세종시 안에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한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세종대왕 스쿨 콤플렉스(School Complex)’가 설립돼 국내 어느 지역보다 창의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딸은 멋진 대학생활을 꿈꾸며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세종시 안의 첨단 지식산업단지에선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최고 연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김 씨의 딸 같은 아이들은 이제 나고 자란 고장에서 명문고와 명문대, 좋은 일자리까지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이연구 교수

한국의 자랑 ‘중이온가속기’ 개발에 가슴 뿌듯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이연구 교수는 세종국제과학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세종시로 왔습니다. 3백30만 제곱미터의 널찍한 부지에 지어진 세종국제과학원은 세종시 안에 만들어진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첨단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 등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등을 돌아볼 때만 해도 참 부럽단 생각을 했던 이 교수, 요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세종국제과학원과 우리 기술로 지어 '한국의 자랑'이 된 중이온가속기를 생각하면 한국의 과학자란 자부심에 가슴 뿌듯합니다.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정중앙에 위치한 덕분에 이 교수는 요즘 전국 어느 과학단지든 당일 일정으로 세미나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소(Site-Lab)와 첨단융·복합연구센터 연구단이 대구와 부산 등 동남권, 아산과 원주 등 중부권과 전주, 광주 등 서남권에 분산 설치돼 있어 '네트워크 연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주민 박서울 씨

깨끗한 주거환경·문화생활 재미도 쏠쏠해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박서울 씨, 그의 업무인 차세대 전지 분야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며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한동안 초중학생인 자녀교육 문제로 서울에 남기 위해 차라리 이직을 해야 하나 '극단적 고민'까지 했지만 세종시에 자립형 사립고와 기숙학교,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목고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고려대에 카이스트까지 명문대들이 세종시 안에 있으니 굳이 사교육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서울에 남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 씨 가족이 막상 세종시에 와보니 전체 세종시 에너지의 15퍼센트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도 적게 듭니다. 시 전체에 최첨단 자원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다 보니 이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일러스트 · 이승현

박 씨의 아내는 이곳저곳 공원과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세종시 한복판의 중앙공원에서는 개방형 수목원이 상쾌한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주말이면 박 씨 가족 모두 중앙공원에서 금강시범지구까지 연결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 나들이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운영하는 소주제 박물관은 나들이 재미를 살려줍니다.

기업인 최사업 씨

벤처투자 전담 펀드로 우량기업 꿈 이룹니다

벤처사업가인 최사업 씨는 세종시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주 잘한 선택이란 생각에 흐뭇합니다. 최 씨가 설립한 그린에너지 개발 사업체는 부지 공급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도 최장 15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아 여유자금을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앙에 있다는 이점을 살려 세종시는 물론 전국의 과학단지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벤처기업들이 연대해 기술이전과 사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가 설립한 기술금융센터가 문을 열어 기술금융, 기업컨설팅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즈마(Yozma)펀드' 같은 벤처기업 투자 전담 펀드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최우량 벤처기업을 향한 최 씨의 꿈은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리틀 제네바'

외투기업·국제기구 입주… '아시아 실리콘밸리' 급부상

요즘 세종시 안의 화제는 단연 '리틀 제네바'입니다. 리틀 제네바는 과학 연구와 교육, 투자와 관련해 한국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고 즐기는 곳으로, 외국어 표지판이 즐비한 거리 풍경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면면에서 다문화가 물결칩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이들도 유비쿼터스 환경을 통해 사방에서 접속이 가능한 영어 통·번역 서비스에 외국인 전용주택단지, 외국인 전문교육·의료기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

리틀 제네바에서 발행되는 '스트리트 매거진' 수준도 가히 '글로벌'합니다. 어느 연구소 모 연구원이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이 유력하다는 소식, 10년 전 첫 수출 이후 세계 원전시장의 선두 주자로 부상한 한국이 이번엔 과학 혁신도시의 성공모델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것이라는 소식, 얼마 전 한국의 새로운 원소 발견으로 '코리아늄(Koreanium)'이 주기율표에 올랐다는 뉴스도 있었군요.

지금까지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날개를 달아준 세종시의 2020년 새해 벽두 소식이었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보아주십시오”

세종시 수정안 탄생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원안에 대한 개선책과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곡절 많은 사연을 들어봤다.

1월 11일 오전 세종시 수정안 발표 현장에 배석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송석구(70)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이다. 수정안 발표 조금 전, 송 위원장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민간위원은 두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세종시 수정안 탄생에 힘을 보탠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를 쳤다.

지난해 11월, 누가 봐도 ‘참 어려운 자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세종시 수정안 탄생의 산고(産苦)를 함께 치른 송 위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를 맡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해야 본전일 것이란 걱정 어린 충고를 듣기도 했다”는 송 위원장은 대전 태생으로, 대전에서 22대째 살아온 ‘충청도 토박이’다.


동아DB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송석구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책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출범 이후 2개월간 세종시 현지를 방문하는 등 8차례에 걸친 공식회의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수정안을 위한 제안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 측에서는 송 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등 7명이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수정안 발표 직전 ‘마지막 민간합동위원회 회의’를 하긴 했지만 민간위원들의 공식 임기가 1년이어서 송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민간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다시 세종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민관합동위원장으로서 수정안 마련이라는 임무를 일단 마친 소감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교육에 매진해온 사람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역사적 현장에서 이제까지 배운 학문과 경륜을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 후손을 위해 부끄럼 없는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관합동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수도 전체를 옮기겠다고 했다가 행정수도 위헌판결(2004년 1월)이 내려졌고, 결국 국회에서 9부 2처 2청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통과됐지만(2005년 3월) 이전이 시작되는 2014년이 다가오는데도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못하고 미뤄져왔습니다. 도시란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의식주와 일자리가 필요한 곳이 도시이고, 우리가 논의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 점은 어떤 부분인지요.

원안이 가진 3가지 문제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효율성입니다. 9부 2처 2청이 세종시로 분산된다면 과연 국가 경영이나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검토했습니다. 84억원의 거금을 들인 화상회의 시설도 결국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전 정권에서조차 '부분적 역할'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입니다. 긴급상황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국무회의 등을 위해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수도를 분할한 독일에서도 장관들은 모두 베를린에 있습니다.

셋째, 인구 50만의 도시 가능 여부입니다. 원안은 2014년부터 정부 부처를 옮기고,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의 인구를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의 일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봐야 유동인구를 포함해 4만~5만명에 불과합니다.



조영철 기자

기틀을 다지고 있는 세종시 현장. 자족기능을 갖춘 과학·교육도시로 향후 산학연 시너지 효과의 산실이 될 것이다.

> **"도시란 하루아침에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의식주와 일자리가 필요한 곳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안 작성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종시로 관공서만 이전해서는 비효율성과 긴급상황 대처, 인구 목표 달성 등 3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앙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 실제 드나드는 민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유동인구 기대치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이란 중책을 맡은 중앙 부처의 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속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한 정부의 행정 부처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원안을 고쳐 자족기능을 3배로 넓힌 과학·교육도시란 수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란 제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시했는지요.

'누가 오라 그랬나. 온다 그랬다, 간다 그랬다…. 우리는 배알도 없나.' 저의 고향이기도 한 충청도 분들의 정서는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특히 세종시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라면.

원안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가 경영관리의 문제, 국정 운영 난맥, 이런 말들로도 다 포함할 수 없는 문제이고 비용의 문제만도 아니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총장으로 있는 가천의과대학도 사무처, 기획처 등이 분산돼 있으면 중대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는 오죽하겠습니까.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이견(異見)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를 이뤄낼 수 있을지요.

결국은 반대자들을 만나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대자들에 대해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수정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세종시 지역민들과 여타 지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약속'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헌법도 바뀝니다. 원효대사 말이 "말하는 바 그대로 들으면 용서할 게 없지만, 말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용서 안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만 보려 들지 말고 진정 나라의 미래를, 수정안에 담긴 진실을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G

글·박경아 기자



세종시 이것이 궁금하다

전국 고루 발전시키는 '화이트 홀'

1월 11일 세종시 발전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향방에서부터 발전 방안의 추진 경위와 내용, 향후 계획 등 세종시와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A

Q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A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첫 마을·시범단지 부지 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으로,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부지 조성, 광역교통시설 및 주택 건설 사업이라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다른 사무실 용도(과학벨트 본부 등)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정부청사가 오지 않으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A 정부 예산 8조5천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는 1조 6천억원으로, 이 돈은 세종시의 첨단 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Q 원안의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비능률의 문제는 화상회의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국가의 주요 정책 논의를 화상회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장관들이 "영상으로 회의하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직접 모여서 하자"는 등의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됐으나 이용 실적은 0.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국가 기밀정책을 사이버로 논의할 경우 해커 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를 상대로 한 업무에서는 화상회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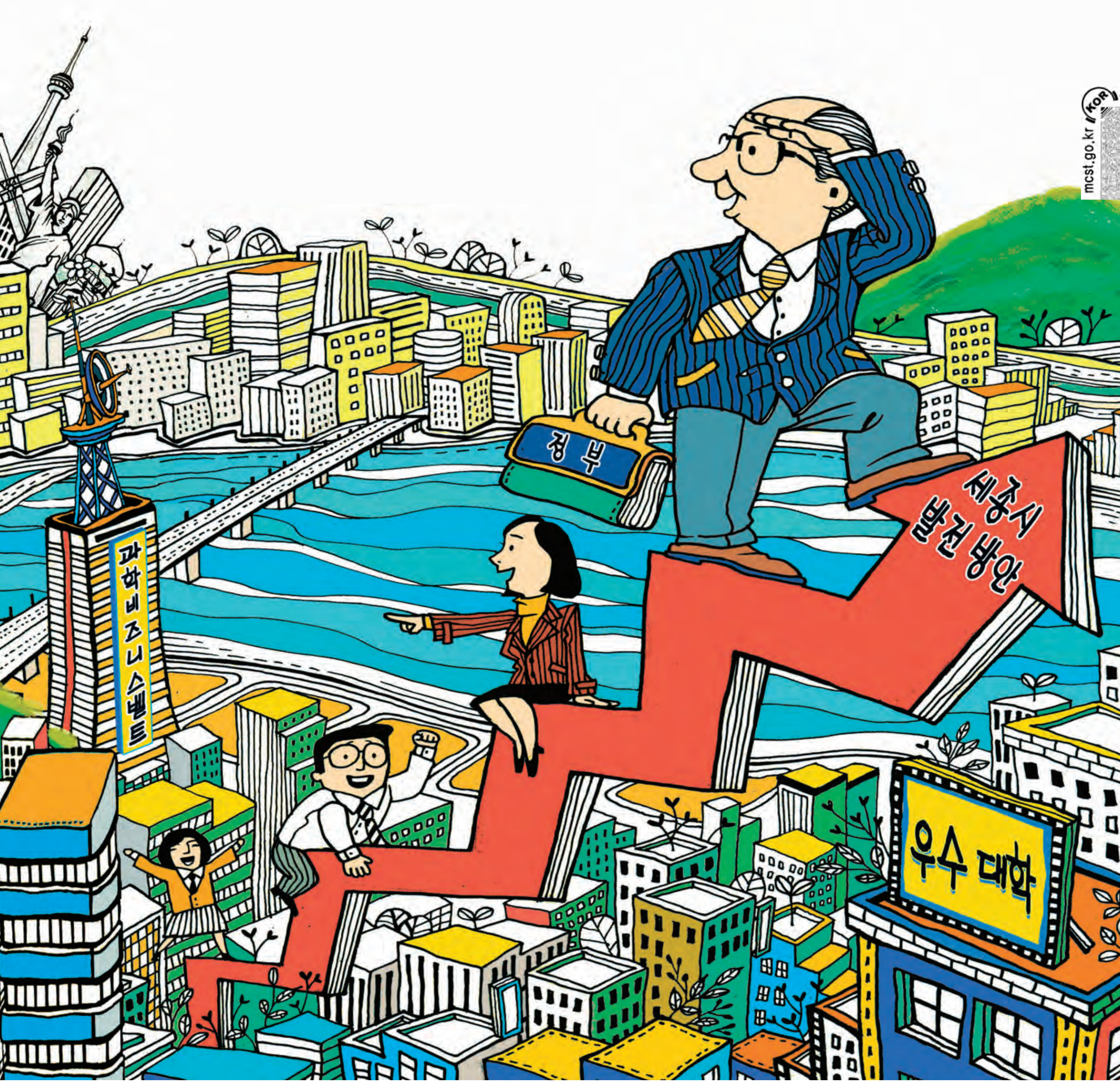
Q 행정기관을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A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라면 행정부보다는 기업, 대학이 가는 것이 인구 분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천5백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중 공무원 1만명(가족 포함 2만~3만명)이 옮긴다고 과밀 현상이 해소될 리 없습니다. 세종시 인구 목표인 50만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해도 수도권 인구의 2.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또 중앙 부처 분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조~5조원에 이르며 향후 20년간 비용은 1백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을 수도 분할에서 기업, 대학 이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Q 다른 지역에서는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합니다.

A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 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 공급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산업용지→주택용지→상업용지)하고, 지나친 성·



세종시 발전 방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을 수도 분할에서
기업 · 대학 이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높이고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절토량을 줄이며, 공사 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리는 방법으로 이룬 것입니다. 혁신·기업도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Q 행정이 자족 기능의 핵심 아닌가요.

A 정부를 이전하게 되면 음식점과 인쇄소 몇 개가 따라 들어갈 뿐입니다. 혁신도시 계획으로 동반 이전하는 산하기관도 없습니다. 자족기능의 성패는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행정기능 중심도시인 과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과천은 정부청사를 이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족기능이 부족합니다. 청사가 도심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세수(稅收)는 1년 예산의 5퍼센트 수준입니다. 경마장이 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50.9퍼센트(2009년 당초 예산 기준)로 전국 평균 53.8퍼센트보다 낮습니다.

Q 세종시 원안 수정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 포항에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서고,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전, 오송, 오창 같은 세종시 인접지역은 물론 여타 혁신·기업도시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른 자족기능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이지, 다른 지방에 입주할 것을 빼앗아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종시는 지역발전을 훼손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입니다.

Q 거점 고용과 유발 고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A '거점 고용'은 초기에 인구를 유입하는 기폭제인 기업, 대학 등 거점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인구이며, '유발 고용'은



조영철 기자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2009년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50.9퍼센트로 전국 평균 53.8퍼센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문화, 구매, 의료 서비스 등 거점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를 말합니다. 원안의 거점 고용은 약 2만9천명(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월산산업단지, 대학 고용인구), 그에 따른 유발고용은 5만5천명으로 고용자 1인당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약 17만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시 공무원 등 확정된 거점 고용 1만7천명과 유발 고용을 포함해도 실제 유입 인구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목표인구 50만명 달성 또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발전 방안은 자족용지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업, 대학 등 유치로 거점 고용 8만8천명과 유발고용 15만8천명을 합쳐 총 24만6천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합니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 인구 유입 목표가 40만명으로 축소된 것 아닙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 인구 50만명(주택 20만 가구)에 필요한 일자리 25만 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할 것입니다. 다만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개발예정지역내 40만명(주택 16만 가구),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해 나머지 10만명(주택 4만 가구)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인구 목표는 50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주변지역에 1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합니까.

A 지난해 말 행복청이 수립 고시해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명(주택 4만 가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 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것입니다.

Q 원형지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합니까.

A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외에 부지 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토지개발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을 쌓아 땅을 높임), 세부도로 등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공급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원형지 개발 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기는 어려우므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용지만 원형지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Q 원형지 공급가격 책정 기준은.

A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의 용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책정한 가격이며, 개발비를 포함할 경우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표 참조).

Q 원형지 이외 다른 토지의 공급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A 핵심 거점기능은 이번에 투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투자 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 위치, 형상, 업종, 공급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Q 토지 저가 공급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자는 어떻게 메우나요.

A LH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재정 지원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시 토지매각은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업용지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 매각토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각이 가능한 가용지를 늘리고, 지나친 성·절토량은 줄이며, 공사 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려서 산업용지 저가공급으로 인한 결손을 보충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매각대상 용지 조성원가는 3.3제곱미터당 2백27만원으로 다른 혁신도시 평균 조성원가 3.3제곱미터당 2백13만원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이 같은 매각방식 조정 및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산업용지 가격을 낮춘 것이지, 재정 지원을 통해 적자를 메워 저가 공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혁신도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면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기업과 대학의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담보 수단은.

A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대학이 모두 연차별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이며,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협약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토지 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 어떤 기업을 더 유치할 계획입니까.

A 이번에 유치한 기업은 초기 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거점 자족기능을 마련하고자 전경련 등의 협조를 받아 개별 접촉해 유치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는데, 향후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 투자유치팀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Q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에 준공 가동되는 시설도 있습니까.

A 일부 기업의 연구소와 산업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착공토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Q 법을 개정하기 전인데도 양해각서(MOU) 체결이 가능한가요.

A MOU는 법령,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며, 통상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각서 내용에 포함해 체결합니다. 통상적인 MOU는 신뢰원칙에 따라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까지는 부여되지 않으며,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해 체결합니다.

Q 세종시는 정부가 입주기업까지 알선하면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만 혁신도시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백57개 공공기관 중 1백17개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11개 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 13개와 세종시 이전기관 15개도 조만간 승인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 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한국가스공사(대구), 대한지적공사(전북), 한국관광공사(강원) 등 18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충남 연기군의 세종시 '첫 마을'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세종시 및 인근 산업단지 토지 공급가격

토지	공급가격	공급 기준
원형지	36만~40만원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격 (78만원)에서 조성비(38만원)를 제외한 수준과 비교
조성지	산업용지 50만~1백만원	오송 · 오창 · 대덕산업단지 공급가격을 감안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대덕테크노(98만원)
	연구소 1백만~2백30만원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해 결정

(기준 : 3.3제곱미터)

5년간 100조… 지역발전 '올인'

5+2 광역경제권별 5개년 발전 계획 추진

정부는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후에도 지역개발 정책의 기본 틀인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광역권의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에 총 1백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가 함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동남광역권에는 옥포조선소(사진), 부산항, 김해공항 등 산업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정부는 분권, 특화, 상생의 원칙하에 5+2 광역 발전 모델을 추진해왔습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해왔습니다. 금년은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1백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입니다."

지난 1월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지역개발 정책의 포부다. '5+2 광역 발전 모델'은 정부 지역개발 정책의 기본 틀이다. 광역권이란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지난해부터 전국 5+2 광역경제권별 5개년(2009~2013)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5+2 광역경제권'이란 정부가 각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즉 전국을 인구 5백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5백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광역권별로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5년간 총 1백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역경제권별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살펴본다.

충청권 | 대전·오창·오송 연계 '한국의 실리콘 밸리'

지난해 9월 출범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충청권을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해했다. 이 계획은 세종시를 충청권 산업 발전의 축으로 삼아 인근의 대전, 오창, 오송 등과 연계해 정보기술(IT), 의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를 인재 양성의 메카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겠다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으로 삼아 과학 연구, 비즈니스, 국제적 정주환경을 갖춘 과학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 기존 충청권 개발 계획이 충청권 중심의 개발 계획이었던 데 비해,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방안은 전국을 연계하는 방안으로까지 한발 더 나아갔다. 즉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존 충청권의 과학산업 거점을 묶는 C벨트, 서울, 광주, 강릉, 대구, 부산 등 주요 과학산업 거점을 연계하는 K벨트까지 확장했다. 특히 K벨트는 세종시를 거점으로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시도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유도할 전망이다.

수도권 | 동북아 경제권 핵심축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담당

지난해 12월 7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광역경제권은 미래의 경쟁력이자 오늘의 경쟁력"이라면서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 광역경제권 개발의 최종 목표는 수도권을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이 가진 과학기술 인력, IT, 광역 인프라 등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핵심 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가 화합해 △지식기반산업 육성 △광역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기지 구축 △수도권 규제합리화 등 4개 전략을 설정하고, 2013년에 마무리되는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호남권 | 친환경 녹색산업 광역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

광주시와 전라남북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7개 분야 1백61조원대의 5개년(2009~2013)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권 광역경제권의 비전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

INTERVIEW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결코 없다"


조영철 기자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주요 임무는 정부 각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로, 헌법에 규정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71) 위원장에게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 이후 '5+2 광역경제권 개발' 향방에 대해 물어봤다.

세종시 계획 수정 이후 5+2 광역경제권 개발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산업 개발, 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망라하는 광역경제권 육성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10년에만 선도산업 육성에 3천2백95억원, 인재 양성에 1천3백45억원, 30대 선도프로젝트에 3조6천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R&D)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광역경제권은 응용 또는 생산성 R&D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세종시는 개발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기능을 담을 수도 없다. 즉, 세종시는 5+2 광역경제권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광역경제별 선도산업 육성이 세종시와 중복된다고 지적하는데.

세종시로 인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다. 일부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향후 계획 중인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세종시 입주기업은 대부분 신규투자이기 때문이다. 선도산업은 해당 권역의 지역산업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시도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자체 선정한 것이며, 특정 광역권에 전속된 것은 아니다. 특히 선도산업은 유망상품 개발을 위한 핵심부품소재 개발이 목표인 만큼,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선도산업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대기업은 대부분 최종 구매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미 선도산업은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사업이 구체화되는 데는 시기적 차이가 있어 향후 연계 협력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겠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업체에 원형지 공급,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른 혁신도시에도 이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인가.

혁신도시 개발에도 세종시와 동등한 수준의 원형지 공급, 세제 지원, 분양가 조정 등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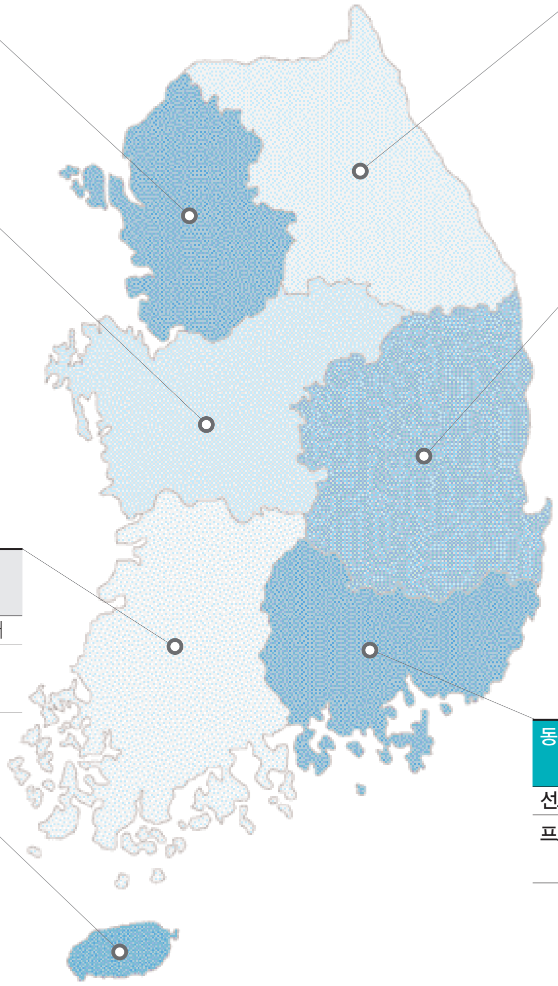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선도산업	지식정보산업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선도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프로젝트	무선통신 반도체 등	신약 실용화 후보물질 등

호남권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프로젝트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카 LED 등

제주권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선도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프로젝트	먹는 샘수 물치료	컨벤션 인센티브투어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선도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프로젝트	의료기기 U-health 등	관광객 유치 의료바이오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 산업의 신성장지대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IT융복합
프로젝트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의료기기 로봇

동남권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선도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프로젝트	그린카 해양플랜트	기계부품 수송부품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의 창조지역'. 문화예술 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북 '스타일 전략기지', 전남 '여수·화순·해남의 고대문화권' 등 호남 3대 문화권 발굴과 글로벌화 △해양생태자원 등 저탄소형 녹색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광역 클러스터 환경 및 지식창출 시스템 구축 △신성장산업과 지역산업 간 융·복합사업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동남권 |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물류 중심지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가 협력하는 동남권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 기간산업망과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는 게 장점이다. 이를 살려 4대 산업 발전축이 추진된다. 4대 산업 발전축은 △물류, 국제비즈니스의 부산대도시권 △자동차, 조선의 울산대도시권 △로봇, 기계, 해양플랜의 진해만 환상권 △항공우주, 소재의 사천만 환상권이다.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고부가 클러스터산업 육성 △관광의 융합기지화,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초국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대 선도산업으로 수송기계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이 꼽히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그린카 오토벨트, 해양플랜트, 정밀화학, 지능형 로봇 등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대경권 | 전통문화·지식산업 육성… 태양광·수소연료전지 주력

대경권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연계 협력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워진 4대 중간 목표는 △녹색성장 기반 구축 △기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 간 상생 네트워킹 △한국 속 한국관광 구현이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2대 선도산업인 태양광, 수소연료전지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린에너지 우수 연구개발(R&D) 및 인력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태양광 주요 부품 및 주변 장치 개발, 수소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를 위해서는 첨단의료산업벨트와 실용로봇산업벨트가 구축되며, 지역 간 상생 네트워크 방안으로 선도산업의 상호 연계가 모색되고 있다.

강원권 | 충청권·경기권 연계…초광역 의료·관광벨트 추진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강원권을 '동북아 녹색성장의 신발전 지대'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12조3천억원을 투입해 △의료융합·의료관광 선도산업 △지역 전략 진흥사업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방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권 개발에는 타 광역권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도 들어 있다. 충청권과 연계한 초광역 의료벨트 구축, 수도권 접경 지역의 공동산업단지, 평화관광로, 바이오가스 클러스터 사업 추진, 경기도 접경 지역의 관광벨트 추진 등이 그것이다. 한편 강원권에서는 동북아 애니메이션 허브 구축, 태양전지 사업, 그린카 부품산업 육성 등 문화 콘텐츠 및 차세대 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권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목표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해 6월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타 광역권과 차별화되는 선도산업으로 '물, MICE(회의·컨벤션)산업'을 확정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권에서는 청정 자원을 활용한 물 산업에 77억원, 국제 수준의 MICE산업 육성에 32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제주권의 4대 선도 프로젝트인 △민·군 복합형 미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해양과학관 건립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 항공운송 능력 확충 분야도 올해 세부 프로젝트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G

글·최은숙 기자



지역발전위원회

지난해 전국 7대 광역권에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말 대경권 위원회 출범식.



대덕테크노밸리

정부는 세종시와 대덕, 오창, 오송 등 충청권의 주요 과학거점을 연계하는 C벨트 발전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세계는 지금 광역개발권이 대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지역경쟁력 향상에 주력

광역경제권 개발은 세계적 추세다. 과거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와 나눠주기식 사업이 지역발전 정책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 선진국들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송우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기존 행정구역 또는 국경을 초월한 광역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1998년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광역화했다. 9개 권역에는 지역개발청(RDA)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 권역의 면적(1만4천 제곱킬로미터)과 평균 인구(5백60만명)는 한국의 7개 광역경제권 평균과 비슷하다. 프랑스는 좀 더 일찍 서둘렀다. 1982년 전국을 22개 광역행정 단위인 레지옹으로 나누고, 2000년부터는 22개 레지옹을 6개 대광역권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도 2005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8개 광역지방계획 구역으로 개편했다.

한편 국경을 초월한 나라 간, 도시 간 연계도 활발하다. 국경을 접한 유럽 국가의 경우 국경 도시 간의 공동 경제협력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시 사이 외레순 해협에는 지난 2000년 두 도시를 잇는 다리가 건설되면서 초국경 광역권이 형성됐다.

이 광역권은 세제를 통합 운영하고, 노동력을 교환하는가 하면 공동 항구를 운영해 국제 운송 인구를 늘리는 등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동부의 엔스헤데 지역과 독일 북서부의 그로나우 지역을 비롯한 국경 지역의 1백30여 개 지자체는 1970년대부터 경제협력 논의를 진행해 현재 유레지오(EUREGIO)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독일과 체코는 국경 지역에 자유무역지대인 '보그트란트(Vogtland)'를 만들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일 간에도 초광역권 협력 바람이 불고 있다. 2008년 10월에 초광역 경제권 형성 공동선언을 한 부산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도 좋은 예다. 두 도시는 지난해 8월 풍력발전 분야 등 64개 협력 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업들을 상대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가 하면, 교통카드 등 양 도시의 전자화폐를 공동 사용토록 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으로 지역 경계 사라져… 광역경제권이 세계적 추세

정부는 소외받는 지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활발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은 별개의 구획 구간이 아닌 '개별성'과 '독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가 강조되면서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과 수평적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대구 경북도청에서 가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초광역개발권으로 묶어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진국의 도농통합과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주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역 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지역발전정책이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투자를 추구했고 산술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부처가 제시한 국고사업의 예산 확보나 단순 집행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다.

국경지 해안권 중심 초광역개발권 육성도 추진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을 크게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을 단위로 설정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문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 눈에 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 제주권을 더해 만든 5+2 광역경제권은 각 광역경제권마다 갖고 있는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권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를 활성화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역경제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가 될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 내에서 교육, 취업의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산업혁신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경지역에 접한 해안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된 초광역권은 4대 벨트로 나뉜다. 남북이 닿아 있는 부분에 형성되는 남북교류·접경벨트, 지식·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경제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남해안 선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가 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로 구성돼 광역경제권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이 대도시와 경제발전을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만 무게를 둔다면 기초생활권은 농어촌을 포함하는 1백63개 전국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특히 기초생활권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행해지는 기초적 공간이기에 광역경제권이나 초광역개발권 발전에 바탕이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뤄지고 지역발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

글 · 김민지 기자

"소지역주의 극복이 지역발전 성공 열쇠"

지난해 완성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올해부터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발전이 성공하려면 각 지역끼리 '연계'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인년 새해는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원년이다. 지난해 말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완성되어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 새로 구성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동 사무국도 금년부터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지역발전 정책 틀의 큰 변화는 자원의 지역 간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5백만명 또는 1천만명 단위로 지역을 묶고, 거점 대도시를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특수한 강원권과 제주권, 인구가 2천3백만명을 넘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성공 여부는 개별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소지역주의인 '내 것 챙기기' 행태 극복에 달려 있다. 소지역주의는 혐오시설은 기피하고 선호시설만 자기 지역 내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동일 경제권 및 생활권인 광역경제권 내에서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다툼으로 여러 사업이 부적절한 곳에서 추진되거나 중복 추진되어 재원 낭비와 성과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거점도시에서 중소도시 간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

주민 직선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지역주의의 극복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자치단체장들은 투표를 의식해 단기적 관점에서 주민 선호시설이나 숙원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자치단체장들의 크고 넓은 안목과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경제권 차원의 사업 관련 권한을 광역발전위원회 및 동 사무국에 대폭 위임하는 동시에 사무국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계층구조(Urban Hierarchy)'와 '지식창출–확산–활용' 사이클을 결합한 광역 클러스터 형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권역 내 중추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비교우위 요소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고 각각에 적합한 지식창출, 확산, 활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권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거점 대도시는 글로벌화, 지식창출, 고급 인재 양성,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도시는 산업생산 거점, 소도시는 농산어촌 생활거점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비도시 지역인 농산어촌은 자연 및 향토 자원의 친환경적 산업화의 장(場)이 되도록 한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획기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 전체의 글로벌화를 이끌면서 주변 산업집적 지역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완결형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거점도시–중도시–소도시–비도시 간 연계 인프라를 확충해 권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거점도시~중소도시 간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은 복수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역정책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획과 추진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행정시스템과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추진 시스템 간의 조화, 각 시도별 유관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규모의 경제'와 '연결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이 발전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G

글 · 장재홍 산업연구원 지역정책팀장


동아DB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잘 실행되려면 거점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오송·오창·대덕·대전·새만금…
세종시, 대한민국 성장의 씨앗 될 것

KTV 특집대담 〈미래로 가는 명품 세종시〉 지상중계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든다는 발전 방안이 발표된 1월 11일, KTV는 전문가 4인을 초빙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세종시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교두보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대담에 참석한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서종대 세종시추진기획단 부단장, 박철곤 한양대 특임교수(왼쪽부터).

세종시 발전 방안이 발표된 1월 11일 오후 한국정책방송 KTV는 생방송 특집대담 〈미래로 가는 명품 세종시〉를 마련했다. 송지헌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 대담에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박철곤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서종대 세종시 추진기획단 부단장이 참석해 세종시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세종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사회자 송지헌(이하 사회) 경인년 새해 벽두, 최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적 관심사는 세종시 발전 방안입니다. 중앙 부처의 분산으로 발생할 비효율과 낭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새 발전 방안에 담긴 정부의 입장인데요. 반면 충청 도민들과 야당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먼저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종대 저는 그동안 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분당 면적의 4배인 세종시의 원안을 손댄다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역사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저희 세종시 추진기획단에서 두 달 동안 집약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첨단 경제도시를 만든다는 비전을 담은 새로운 발전 방안이 탄생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인구 50만명을 지향하고 있지만, 검토 결과 10만명도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나 대학 입주를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발전 방안에서 대폭 보완했습니다.

민동필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과학은 우리 꿈이고, 기술은 우리 날개와 같다'는 정운찬 총리의 말처럼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데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 선두 국가로 올라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꿈의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을 세종시로 잡은 것입니다. 지식경제시대에 전조등과 같이 앞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기초과학이고, 세종시에서 기초과학에 중점을 둬서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양호 자족기능 용지를 크게 확충한 것도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6.7퍼센트였는데, 수정안에선 20.7퍼센트로 늘렸습니다. 자족기능의 평가 척도는 인구 대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입니다. 자족기능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도시계획적으로 용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원안의 자족기능 용지 비율로는 인구 10만명 선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토지 가격,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종다양한 인센티브

민동필 **이공계 기피현상·원천 기술 확보 등 '기초과학 요람' 만들 계기**

서종대 **세계 최고 첨단 경제도시 세울 것 국민들의 이해·지지 당부**



연합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11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내 가전매장에서 매장 관계자가 뉴스특보로 방송되는 정 총리의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가 패키지로 들어감으로써 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역발전에도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세종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반경 50킬로미터권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창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카이스트 등 연구시설과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 있어요. 이처럼 과학과 산업의 잠재력이 뛰어난 데다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인프라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탁월한 입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곤 외국의 사례를 본 후 국가경쟁력 면에서 행정 부처를 분할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에 대통령, 총리, 의회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필요할 때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죠.

브라질이나 호주는 수도를 전부 이전했는데, 실제로 인구분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독일은 유일하게 수도를 나눠서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통일되면서 본에 복지, 국방, 교육 등 6개 부처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 장관들은 아예 베를린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좌담회 도중 상영된 독일 현지 취재 영상에서 본과 베를린의 행정 부처 분할로 인한 비용 손실이 연간 1백7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페더 젤 전 베를린 도시계획국장은 "부처 장관들이 베를린에서 일하고 그 밑의 직원들은 본에 남아 일을 하는 웃지 못할 구조가 됐다. 수도 분리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 모던한 e메일과 인터넷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이제 문제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입니다. 가서 살려면 문화 인프라도 구축돼야 하고, 일하다 만나서 시집,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제대로 된 도시죠.

박양호 돈·사람·일자리 창출하는 실질적 지역 발전 이룰 전진기지

박철곤 자율형 사립고·특목고 등 유치 우수한 자녀교육 환경 구축

박철곤 사람이 모이려면 자녀교육 환경이 아주 우수해야 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종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등을 유치해 아주 우수한 자녀교육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양호 세종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수도권 과밀이 더 심해집니다. 세종시 발전 방안은 인구 과밀화 해소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박철곤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은 다 같이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충청 도민들의 민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제는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양호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의 거점을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서종대 이번 발전 방안은 충청권과 다른 지방의 미래를 두루두루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관건인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민동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데는 과학기술의 기여가 컸습니다. 새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는 것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주셨으면 합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놀라워라, 아줌마의 힘!

주부모니터단 2기 출범… 생활아이디어 뱅크 맹활약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1기 주부모니터단이 출범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주부모니터단의 아이디어 70여 가지가 실행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삶의 지혜를 모아 세상을 바꾸고 있는 주부모니터단의 활약을 취재했다.

주부모니터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주부 박영주(44) 씨. 주부모니터단원으로 활동하는 박 씨는 주변에서 어린이집이 6시에 끝나 귀가가 늦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자주 들었다. 박 씨는 직장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통합 야간반 설치'를 제안해 채택됐다. 그 결과 올 3월부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및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해 전국 1백50개 공사립 유치원이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 문제의 큰 짐을 덜게 됐다.

주부모니터단의 활약은 단순히 주부 주변의 일상을 넘어 남편, 자녀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킨다. 한 여학생은 학교 매점에 진열된 햄버거,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을 보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의 칼로리가 높다고 하



동아DB

주부모니터단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 우리 사회를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2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1기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는데, 비만에 민감한 여학교 매점에서 아무렇게나 팔리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닐까. 칼로리를 표기해 놓으면 사 먹기가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여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주부모니터로 활동 중인 어머니 오영례(42·주부모니터단 제주지역 총무) 씨에게 전했고, 오 씨는 딸의 의견을 정책으로 제안해 채택되는 기쁨을 맛봤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에까지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했다.

우리가 사 먹는 햄버거 세트 메뉴(감자튀김과 탄산음료 포함)는 1천 킬로칼로리가 넘는다. 이는 성인의 하루 필요 에너지 섭취량(남자 2천6백 킬로칼로리, 여자 2천1백 킬로칼로리)의 절반에 가깝다. 햄버거 세트에 열량을 표기해놓으면 이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국내 외식체인도, 세계적인 외식그룹도 주부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무릎을 꿇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렇듯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해 시행한다는 취지로 주부모니터단을 발족했다. 제1기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천41명을 선정했다. 생활공감기획단 김진수 사무관은 "주부모니터단은 지난 1년 동안 1만여 건의 정책 제안과 2천여 건의 민원 불편 제보, 5천여 건의 정책토론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며 "그중 70여건이 각 부처의 토의를 거쳐 실행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생활공감 국민행복 실천대회'는 주부모니터단의 대단한 활약상을 가늠케 했다. 이 대회에서 주부모니터단은 공무원의 제안을 포함해 총 1만7천1백23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베스트 10 가운데 5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야간돌봄 전담 유치원 운영 건의 등 활약 두드러져

주부모니터단이 지난해 거둔 대표적 성과로는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설치'와 '인스턴트 음식 칼로리 표기' 외에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제도 개선(손연화 주부·대통령상) △다자녀 가구 가정 전기요금 추가 할인(조정순 주부·대통령상) △대출금리 변동 시 휴대전화 SMS 문자로 고지(김금빈 주부·국무총리상) △경운기 전복 시 엔진 자동 차단으로 2차사고 예방(이미용 주부·국무총리상)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주부모니터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2기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했다. 올해 2월에 새로 출범하는 2기는 그 규모가 1기의 3배가 넘는 1만2백58명에 이른다. 인터넷에는 이들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www.happylife.go.kr)가 구축돼 주부모니터단의 온라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활동 역시 강화됐다. 정부는 주부모니터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생활공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밀착 지원키로 했다.



생활공감기획단

주부모니터단은 지난해 11월 16일 행정안전부의 에너지 절약 행사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에게 내복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가운데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선택되면 아이들과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평범한 주부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주부로 변신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올해 주부모니터단의 활동 범위는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가정과 연관된 문제를 비롯해 전문직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에너지 절약, 육아, 가정, 복지 등 여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으로까지 확대됐다. 주부모니터단은 특히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녹색생활, 나눔과 봉사 등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합 야간반' 아이디어로 대통령상을 받은 박영주 주부는 "과거엔 평범한 시민이 정책에 관여할 창구가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는데, 주부모니터단으로 활동하면서 내 의견이 국가 정책에 곧바로 반영돼 그 보람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부모니터단 제주도 총무이자 최다 포인트 취득자인 오영례 씨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다. 내가 제안한 정책이 선택되면 아이들과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평범한 주부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주부로 변신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가족들이 더 좋아하니 이 역시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주부모니터단은 의견제안 횟수 등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누적 포인트별로 매달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오 씨의 포인트는 1천5백21점. 총 2백4건의 제안으로 최다 제안자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고 G20 정상회의 같은 역사적인 국제행사도 열리는 올해, 이들 주부모니터단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이 더욱 밝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나, '문화 인터뷰'와 결혼했다

문화캐스터 1호 서주희의 匠人 인터뷰

**우리 문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문화 전문 캐스터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서주희 씨.
그는 특히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과 삶을 새로 조명하는 일을 8년째 해오고 있다.**



서주희 씨는 2009년 9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체메우기 분야의 최성철 장인(왼쪽)을 인터뷰했다.

'문화캐스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뉴스캐스터' '기상캐스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캐스터'란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 혹은 해설자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문화캐스터'는 '문화'라는 콘텐츠를 소개하고 해설하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을 터다.

국내 최초 문화캐스터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 중인 방송인 서주희(30) 씨. 우리 문화계 구석구석에서 숨은 보석을 찾아내 소개하는 작업을 해온 지 올해로 8년째다. 2004년 국악방송에서 아나운서로 문화 관련 뉴스를 전달하다 같은 방송의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에서 문화 공연 현장 인터뷰 코너를 맡게 됐다. '문화'라는 코드에 집중해 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계기다. 문화캐스터라는 별칭도 이때 얻었다.

문화재급 장인(匠人)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의 일이다. 문화캐스터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흙 속에 묻혀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장인들, 그들에게 묻은 흙 떨어내고 감춰진 빛 밝혀내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그렇게 장인들을 만나왔고, 그가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국악방송(서울 경기지역 FM 99.1메가헤르츠, 남원 일원 FM 95.9메가헤르츠, 남도 일원 FM 94.7메가헤르츠) 〈꿈꾸는 아리랑〉 프로그램 '서주희가 만난, 맛난! 우리 문화' 코너에서 매주 수요일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는 KBS 한민족방송 〈오늘과 내일〉 〈가요코리아〉 프로그램 등에서 해외 동포들에게 서울의 삶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코너에 출연 중이다.

그의 꿈이 시작된 것은 엉뚱하게도 미국에서였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그는 졸업반이었던 2002년 미국 오레곤주립대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영어 공부를 위해 기숙사에서 줄곧 TV 토크쇼 프로그램을 보곤 했는데, 그때 방송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특히 방송과 관련된 여러 직종 가운데에서도 직접 사람들과 만나 그들과 소통하고 스스로 방송 원고도 작성하는 등 능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리포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5월 KBS 라디오 리포터로 방송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국악방송과 연이 닿았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바대로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진행까지 하는 1인 3역을 해왔다.

마이크 들고 무작정 따라다녀… 8년째 장인 인터뷰

이후로 그가 만나온 문화계 인사는 2백50여 명. 유명인사일수록 사전에 취재 약속을 잡기 어려웠다. 무작정 마이크를 들고 현장으로 찾아가곤 했다. 취재 대상의 행사 당일 동선(動線)을 파악해서 곁에 따라붙으며 코멘트를 땄다. '헝그리 정신'이었다.

대부분 대쪽 같고, 혹은 과묵하거나 어눌하기도 하며, 때로는 까다로운 장인들을 만나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래 사용하지 않던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에게 장인들의 이야기를 길어올리는 마중물은 '노래'였다.

"장인들께 술을 마실 때 즐겨 부르는 노래 한 곡을 불러달라고 청해요. 자주 부르는 노래에는 그 사람의 삶이 배어 있게 마

렌이죠. 함께 박자를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 그가 만난 장인들, 그들이 부른 노래에는 삶의 고비 고비마다 깃든 애환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의 북 장인 임선빈 선생. 고아원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고아원 형들에게 맞아 한쪽 귀를 먹었다. 소아마비로 다리도 불편하다. 생활을 위해 북을 만들기 시작했다. 장인으로 지정돼 나라에서 월 1백만원을 받게 됐지만 그 돈을 북 만드는 데 쓰고 나면 먹고살 길은 여전히 막막하다. 다 쓰러져 가는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며 생계를 위해 선생은 날품을 판다. 그런 그의 노래는 나그네 설움이었다.

옹기 장인 배요섭 선생. 서울에 단 하나 남아 있던, 그래서 그가 옹기 굽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신내동의 옹기 가마가 재개발 때문에 없어졌다. 옹기 구울 곳이 주변에 없다. 하는 수 없이 선생은 옹기를 만들어 두었다가 경기도 이천에 한꺼번에 싣고 가서 구워올 수밖에 없게 됐다. 선생의 노래는 '번지 없는 주막'. 서 씨는 선생에게 가사 중의 '주막'을 '가마'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고, 선생은 허허 웃으며 개사곡 '번지 없는 가마'를 불러주었다.

'하늘이 내려준 춤꾼'이라는 살풀이춤 대가 이매방 선생에게서 '홍타령'을 끌어내 방송에 내보낸 것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장인들께 술을 마실 때 즐겨부르는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청해요. 자주 부르는 노래에는 그 사람의 삶이 배어 있게 마련이죠. 함께 박자를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찾아가 뵈니 눈길도 안 주시고 바느질만 하시더라고요. 인터뷰할 생각은 젖혀두고 마주 앉아 작업 중이신 바느질에만 관심을 보여드렸어요. 이것저것 바느질에 대해 묻고, 바늘귀도 꿰어 드리고,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나니 '그래 무에가 궁금해 왔는가'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워낙 어려서부터 소리를 배우셨으면서도 춤 인생을 시작하신 이후 한 번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선생님이 결국 춤을 추시며 '홍타령'을 불러주셨어요."

이런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게 모두 보람이요, 자산이다. 하지만 안타까움도 크다. 소중한 우리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들이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은 늘 발걸음이 무겁다. 장인들 대부분은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걷고 싶지 않다. 그만큼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서 씨는 결심을 했다. '이들의 입을 대신하겠다. 이들이 하고 싶은 말, 알리고 싶은 문화를 대신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줄어가는 우리의 장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만나 기록하겠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 자신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러 다니는 인터뷰어'였다면 훨씬 더 주목받는 방송인이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에게는 지금 방송인으로 이름을 얻는 것보다 소명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는 개인의 자유 시간을 누리는 것도, 결혼 계획도 일단 뒤로 미뤘다. "나는 인터뷰와 결혼했다"고 그는 말한다.

서 씨는 기자를 만난 날에도 야생녹차 장인 김동곤 선생을 인터뷰하기 위해 항상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핸드 마이크를 챙겨 들고 멀리 경남 하동으로 달려간다며 걸음을 재촉했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문화캐스터 서주희 씨는 8년째 문화계 인사들과 문화재급 장인(匠人)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공무원, 마술학교 교장 되다

정선군청 백호민 씨, 국내 첫 마술학교서 무보수 봉사

평범한 공무원이자 마술사인 백호민 씨의 꿈이 이뤄졌다. 지난 1월 9일 강원도 정선에 국내 최초의 마술학교를 만든 것이다. 강원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마술학교를 만들기까지 노력했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유마당 이일영 제공

백호민 씨는 "마술학교를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부로 답답한 아이들의 웃음도 되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강원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에 있는 '365 행복마을'에 '매직 빌리지' 마술학교를 개교한 백호민(41) 교장.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정선군청 행정7급 공무원이다. 1993년 6월, 9급으로 공직에 몸담은 백 교장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던 중 2007년 정선군의 정책을 개발하는 미래기획단에 근무하면서 마술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정선군은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크고 작은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이에 백 교장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외지인의 발길을 정선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하다 '마술'을 선택했다. 그리고 유창식 정선군수에게 '마술축제'부터 제안해놓고 마술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백 교장은 공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틈틈이 수도권의 마술학원을 1년간 다녔다. 마술을 배우면서 최현우 마술사 등 마술계 인사들과의 인맥도 넓혔다. 또한 마술과 관련된 글도 쓰면서 한국 마술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2008년 7월에는 한국마술산업진흥학회 이사도 맡았다.

정선에 마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 것은 정선 5일장을 통해서다. 정선 5일장은 서울에서 열차가 운행할 만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민속 장터다. 백 교장은 2007년 4월부터 장이 설 때마다 마술사를 섭외해 장터에서 마술 공연을 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캠프 만들 것"

그는 5일장 마술을 진행하면서 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능력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마술학교를 준비했다. 원래 마술학교 교장으로 외부인을 초빙할 생각도 했지만 무보수 자원봉사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인 자신이 맡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마술학교는 이달 9일에 개교했다. 그러나 그 전부터 많은 이들이 마술학교를 찾았다. 마술학교 개교 이전부터 방문객을 위해 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신체 분리, 공중 부양 등 다양한 매직 포토존을 만들어 개방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에서 40명이, 같은 달 28일에도 40명의 청소년이 팸투어를 왔다.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김태용 과장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지만 마술을 접목한 캠프는 처음"이라며 "청소년들은 누구나 신비한 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술학교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교장은 현재 당일, 1박2일 마술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클로즈업 마술, 특수 카드 마술 등 다양한 마술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학, 과학을 접목한 교육 마술이나 프로포즈 마술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직장인에게는 명함을 줄 때 지갑에서 불꽃이 솟아나도록 깜짝 쇼를 하는 등 비즈니스 마술을 가르칠 생각이다.

마술학교가 의미 있는 이유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고 마술사들의 수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술학교는 숙박을 겸한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자는 인근 펜션을 이용해야 한다. 식사는 마을 부녀회에서 마련한 식단을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

학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마술사들에게 돌아간다. 백 교장은 마술 보급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활동한다.

백 교장은 "마술학교는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며 "마술을 보급하면서 지역경제와 주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마술학교의 목표"라고 말했다. G

글 · 홍서표(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매직 빌리지 마술학교 Tel 010-2230-7340 magicvillage.co.kr

藥 먹은 뒤 酒… 그대로 毒藥

감기약·혈압약 등 복용 후엔 음주 반드시 피해야

약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약을 먹고 나서 술을 마시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히 감기약이나 혈압약 등을 복용한 뒤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러스트 · 김영민

회사원 김진호(43) 씨는 얼마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다.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다 갑작스레 토혈을 했기 때문이다. 병원 응급실로 직행한 김 씨는 의사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술을 과하게 마신 것도 아니고 평소에 지병도 없었지만,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장관 출혈'을 일으켰다는 것.

회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먹은 소염진통제가 문제였다. 평소 편두통 때문에 자주 복용하던 진통제인지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그 뒤에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었다. 김 씨처럼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들에게 약을 복용하고 난 뒤의 음주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기약, 혈압약 등을 복용한 뒤 술을 마시면 위염 등 위장장애, 위장출혈, 간 손상, 저혈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음주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약을 복용한 뒤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약물의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데,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커진다고 한다.

약의 종류나 성분에 따라 음주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양하다. 특히 진통제, 콧물감기,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등 자주 복용하는 약들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김 씨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진통제를 복용한 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심해지면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의 간독성이 증가해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무좀약, 고지혈약 등은 간 속의 독성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들 약을 복용한 이후 술을 마시면 해당 약품을 간에서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이 남게 된다. 이는 간이 손상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진정제, 수면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뒤 술을 마실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알코올의 효과와 결합돼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혈압약과 심장약은 과도한 이뇨·탈수작용으로 인해 신(腎)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저혈압으로 어지럼증이 생겨 보행 사고 위험도 있다.

간 분해능력 떨어져 독성물질 남아 생명 위협할 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의 채규한 약무사무관은 "약을 복용 중일 때는 되도록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며 "굳이 술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미리 해당 약품의 부작용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품의 상세 정보는 의약품 민원사이트(ezdrug.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마당' 코너에 해당 약품의 이름이나 제조업체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에서부터 부작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한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리연구과 Tel 02-380-1804
의약품안전정책과 Tel 02-3156-8006



*도남서원 : 경북 상주시 도남동에 있는 서원. *경천대 : 경북 상주시에 자리한 국민 관광지로 낙동강 1천3백여 리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1500명 꿈나무에 희망 드려요

‘희망드림 장학생’ 선발… 고교생 1인당 185만원까지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 산업재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에게 연간 최고 1백85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올해 접수 기간은 1월 29일까지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고등학교 진학 장학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민영이(가명)는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같은 질문을 올렸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민영이의 학비는 1년에 1백만원이 훌쩍 넘는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어머니가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에 무시하지 못할 큰돈이다.

민영이처럼 한창 공부할 나이의 자녀를 둔 가장이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안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은 당장의 생계유지도 큰 문제지만 교육비 부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장학생’ 선발제도는 바로 이 같은 가정에 힘을 보태주는 지원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9만8천8백명의 학생에게 8백1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신규로 1천5백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_2) 질병 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산업재해 사망근로자·상병보상연금 수급가정 대상

만일 민영이가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선발 시점인 2010년 1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받는다. 단, 연간 학비가 1백8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본인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 요건은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백60만원 미만이거나 2009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1천5백명 선발에 1천8백명가량이 신청해 지원자 중 80퍼센트가 넘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3퍼센트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산재근로자 자녀에게 교육비 혜택을 주는 ‘희망드림 장학생’ 제도는 희망드림근로복지넷(위)과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국 재활지원팀 윤미래 과장은 “장학금 혜택 해당자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드림근로복지넷에서 사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이 시행될 시기에 맞춰 미리 안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유족에 한함),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2009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각 1통씩을 첨부해 1월 29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시키면 된다. 선발자는 2월 10일 개별우편, SMS 안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된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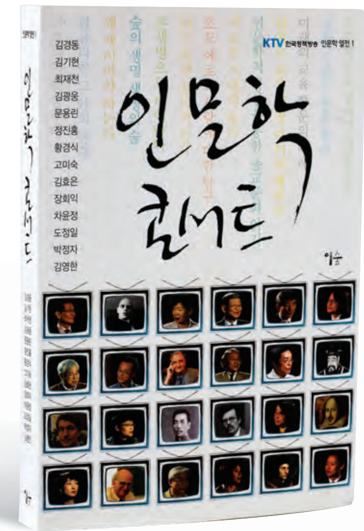
글 · 김정희 객원기자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국 재활지원팀 Tel **02-2670-0419**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희망드림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머리맡에 두고 하루 한 章 13일간의 인문학 여행

KTV 〈인문학 열전〉 책으로 출간

인문학 콘서트
김경동 · 김기현 외 12인 지음 / 이숲 · 1만5천원



최근 2년간 서울대 인문학 분야 교양강좌는 수강 학생 수가 20퍼센트나 줄었다. 대형 서점에서는 인문학 서적 대신 실용·경제 서적이 더 잘 팔린다. 어느 순간 인문학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인문학을 구해낼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TV 프로그램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2008년 6월부터 매주 한국정책방송(KTV)이 내보낸 〈인문학 열전〉 중 시청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3편을 선정해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Humanities)에는 분명 인간(Human-being)이 있다'는 기획 의도에서 보듯 인문학보다 실용학을 추구하는 인문학의 위기에 인문학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만들어졌다.

소외된 인문학의 중요성을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학자들은 방송 진행자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와 대담을 나눴다.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김경동, 김기현)' '통합과 통섭 교육(최재천, 김광웅)' '한국 교육의 미래(문용린)' '윤리와 사랑(황경식, 고미숙)'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인문학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알려준다.

〈인문학 콘서트〉는 이처럼 방송에 출연한 인문학자들의 알찬 명강의를 기록한 대담집이다. 주제가 '인문학'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다. 대담할 때 오간 말들을 구어체 그대로 살려 술술 읽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난해한 학술용어보다 생생한 주변 사례를 담아 이해하기 쉽다.

생생한 주변 사례로 쉽고 친근하게 인문학 만날 수 있어

예컨대 '호모 에로스, 사랑에 대한 탐구'라는 파트에서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는 대중영화를 예로 들어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대사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를 끌어와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듯이 모든 존재가 순환과 변환 속에 있다. 사랑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며 나름의 통찰을 들려준다.

진행자 김갑수 씨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질문하며 독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 특히 인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첫 번째 파트 '우리 인문학의 길'에서 그는 아무리 인문학이 중요하다지만 먹고사는 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인문학의 위기가 왜 한국 사회의 위기인지 등 인문학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물어본다.

서울대 김경동 명예교수는 이 물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인력의 문제가 있었다"며 "우수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 월가에서 뭘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돈벌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또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철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자세가 필요했다"고 답한다. 이처럼 김경동 교수와 서울대 철학과 김기현 교수가 대화하는 '우리 인문학의 길'을 읽고 나면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묻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인문학 콘서트〉는 강의 내용과 관련 있는 저자의 책을 소개하며 '책 속의 책'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책 중간 중간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학자의 파트를 표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여러 명의 학자가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인문학적 대주제로 수렴된다. G

글 · 김민지 기자

사랑합니다, 어머니

글과 그림 · 최영순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 생텍쥐페리(프랑스 소설가)

Culture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화폭으로 강림한 프레스코화



미켈란젤로作 '최후의 심판'

'르네상스 프레스코 걸작 재현' 전

일시 2월 21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9시(1월 25일 휴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관람료 성인 1만3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장애인(3급 이상) 6천원
문의 02-3471-2020 www.sac.or.kr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라파엘로의 '갈라테아의 승리', 마사초의 '에덴에서의 추방'…. 중세와 르네상스 예술을 대표하는 거장 20명의 프레스코화 재현 작품이 국내 애호가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 작품을 선보인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는 연일 관람 행렬이 줄을 잇는다.

프레스코화는 젖어 있는 신선한 회벽에 수채물감이 스며들게 하는 기법의 벽화로, 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많이 그려졌다. 마른 벽에 그린 그림보다 수명이 길어 지금까지 잘 보존돼 있지만 여느 그림처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게 단점.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예술의전당과 아주미술관은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프레스코화를 볼 수 있도록 이탈리아의 벽화 복원 전문가 라차리 가문의 도움을 받았다. 라차리는 지난 3백 년 동안 프레스코화 복원과 보존에 힘을 쏟아온 유서 깊은 가문. 이들은 프레스코화를 실물과 동일하게 재현하는 아프레그라피(Affregraphy)라는 새로운 기법을 창안해 1999년 아시시 성프란체스카성당의 천장화 등 최고의 걸작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영희 전시감독은 "라차리 가문은 원작에 충실한 재현을 위해 무려 1천9백명을 동원하고 3년간 공을 들였다.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뒤 과학적인 전사 기법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두드려가며 안료를 안착시키는 전통적인 제작 기법으로 총 51점의 프레스코화를 원작과 똑같이 재현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과 건물, 삶과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조를 품은 14세기부터 최절정을 이루는 16세기 초까지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 기간에는 관람객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교실 '다빈치와 놀자!'가 부대행사로 열린다. G

글 · 김지영 기자

클래식 음악여행 '비엔나의 음악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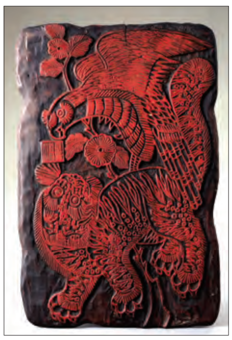
일시 1월 31일까지 평일·주말 오후 2시, 4시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반 1인까지 1만원
문의 02-584-9039~41 www.nto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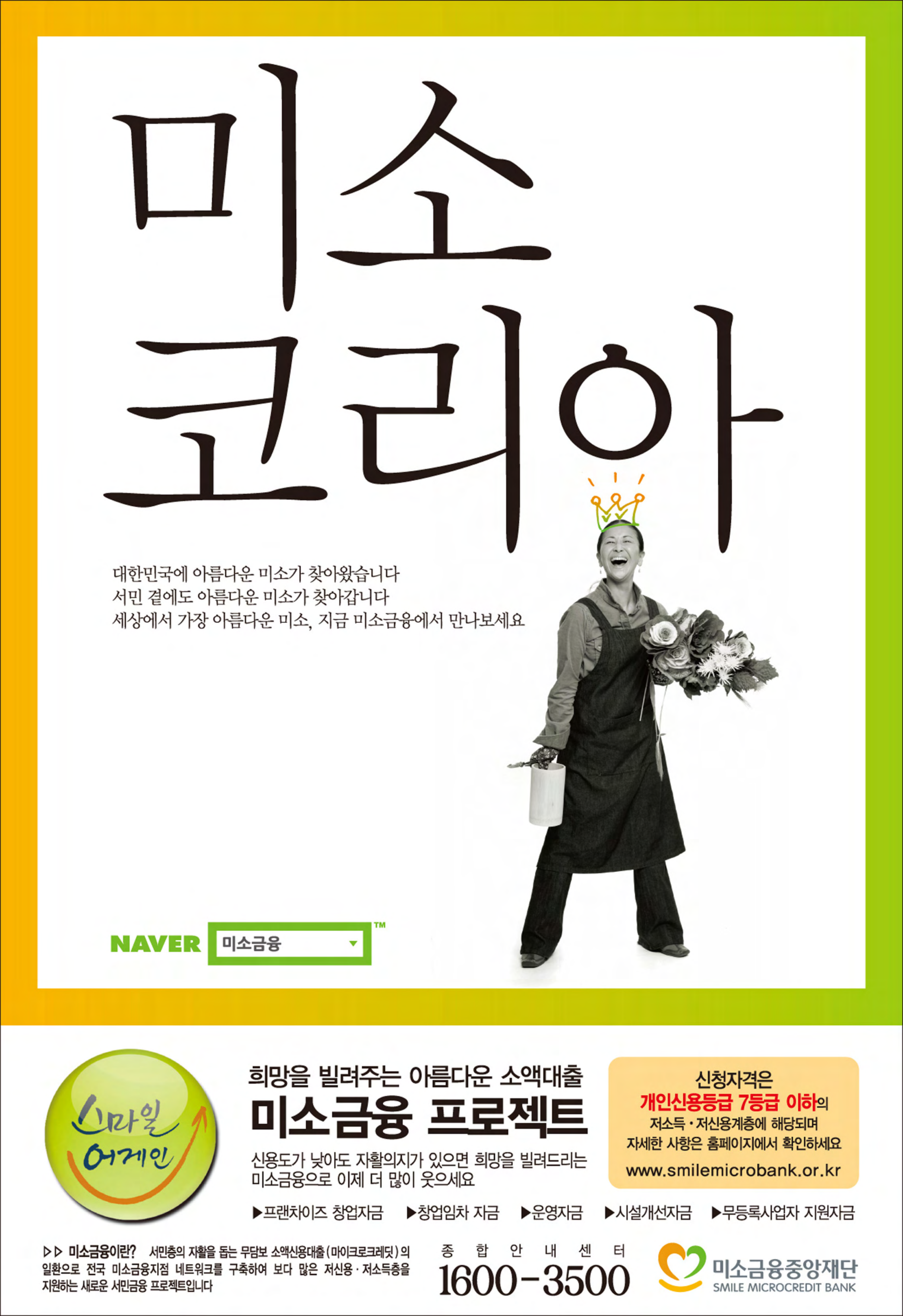
시간여행을 하는 음악상자를 타고 3백 년 전의 빈으로 떠난 노래요정 '노래랑'과 쥐돌이가 벌이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두 주인공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되어 이들의 음악에 얽힌 수수께끼와 여러 가지 재미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간다. 국립극장이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이 공연은 관람 후 교향곡의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되는, 음악교육 효과가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호랑이띠 특별전 '변신(變身), 신화에서 생활로'

일시 3월 1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화요일 휴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I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4-3221 www.nfm.go.kr



2010년 경인(庚寅)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리 생활문화에 깃든, 호랑이와 관련된 상징체계의 다양한 변신을 시각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자 마련됐다. 생태적 특성에서 유래한 호랑이의 신격화, 다양한 이야기나 그림에 보이는 호랑이의 인격화,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상징화된 호랑이의 이미지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인 호랑이가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서도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소
코리아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서민 곁에도 아름다운 미소가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지금 미소금융에서 만나보세요
NAVER
미소금융
스마일 어게인
희망을 빌려주는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프로젝트
신용도가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드리는
미소금융으로 이제 더 많이 웃으세요
신청자격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 저신용계층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smilemicrobank.or.kr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 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 전국 미소금융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저신용 ·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종 합 안 내 센 터
1600-3500
미소금융중앙재단

세종시,
명품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100년이 지나도 후회 없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종시, 교육과학 중심의 첨단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도시로 구축
- 삼성 / 한화 / 롯데 / 웅진 / SSF (오스트리아기업) 등 녹색산업 입주
- 고려대 / 카이스트 등 인재육성 지원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오송, 오창, 대덕 – 세종시 연계 발전체계 구축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중 1.7조를 전국 R&D로 고른 투자
- 전국 선도산업 / 거점대학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차질 없이 진행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